

혹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경찰관 14명을 부산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변호사회관에서 지난달 21일부터 1개월간 벌인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23일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성래 변호사) 를 소집, 절차를 밟아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계 강력2반장 김종두경위 (38) 등 고문수사를 한 것으로 조사된 경찰관 전원에 대해 독직폭행및 가혹행위혐의로 고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0033】 부산변호사회 / “고문경관 고발” / 인권위 결정
중앙일보 94.12.22 22면 (사회) 뉴스 514자

◎강양유괴 수사 14~15명 대상 / 담당검사 징계도 촉구... 파문 클 듯

【부산=정용백기자】 부산지역변호사회는 강주영 (8) 양 유괴·살해사건과 관련, 수사과정에서 고문수사를 한 경찰관 14~1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부산지역변호사회 소속 인권조사위원회는 오는 23일 강양 유괴사건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주·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원종성 (23) ·육영민 (26) 피고인에 대해 고문수사를 한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계 강력반 경찰관 14~15명을 이날 독직폭행및 가혹행위 (형법125조) 로 부산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인권조사위원회는 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참고인에 대해 강압·편파수사를 한 담당검사·수사관등에 대해서도 대검등에 징계조치등을 촉구키로 할 방침이어서 큰 파문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조사위내 강양유괴사건 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장 문재인변호사) 는 지난달 21일 착수한 진상조사활동을 21일 마무리짓고 『강양유괴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엄청난 고문및 가혹행위가 있었다』 고 결론지었다.

【0034】 고문경관 10명 고발 / 부산변호사회
국민일보 94.12.22 18면 (사회) 뉴스 156자

【부산=전인철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성래) 는 만덕국고 강주영양 (8) 유괴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등 관련자들을 고문한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과 강력반 반원 10여명을 22일 독직 폭행및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0035】 「문민」 비웃는 고문 (사설)
조선일보 94.12.23 03면 (해설) 사설 1,222자

권위주의 시대에 수사기관이 멋대로 자행하던 피의자 고문이 민주주의와 인권옹호를 명분으로 등장한 문민정부의 등뒤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부산 북부경찰서가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행한 고문 실태를 들여다 보면, 우리가 마치 무법천지에라도 들어와 있지 않은가 하는 착란에 빠지게 된다.

피의자에 대해서도 그 인권을 유린해선 안될 민주국가의 경찰관이 팔을 등뒤로 돌려 수감채우기, 그리고는 「원산폭격」 자세로 기어가거나, 한 방향으로 빙글 빙글 돌린후 무차별 구타하기,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린채 장판지 사이에 경찰봉을 끼우고 복숭아뼈가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꿰어 앉힌뒤 구둣발로 마구 짓밟는 등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온갖 고문행위를 벌인 사실은 곧 문민정부를 비웃는 정면 도전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된 유괴살인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부산 북부서 강력반의 13명을 부산지방 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은 더 이상의 인권유린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어린 다짐으로 이해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방침이었으나 피고인들의 유무죄와는 관계없이 고문경찰관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며, 문민정부 아래에서도 강력사건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그릇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고발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히로뽕 투약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피의자가 수사과정의 가혹행위가 드러나 무죄선고를 받았는가 하면, 부산 한호맨션 주부 피살사건의 강도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피고인의 경우는 재판과정에서 경찰이 범행에 쓰인 흉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의 사형구형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된 여처구니없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더구나 「조직폭력배를 잘 잡는다」는 공로로 92년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민원형사로 명성을 떨친 수사관의 감춰졌던 고문행적에는 어안이 병병할 뿐이다.

인권조사위원회는 앞으로 계속 검찰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참고인에 대해 강압, 편파수사를 행한 것으로 지목된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대검 등에 징계조치를 촉구키로 할 방침이어서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이 탄생하자마자 채택했던 국제 고문금지 조약에도 규정되었듯이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정보취득 또는 자백을 목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현저한 고통을 가하는」 고문행위는 문명사회 제 1의 공적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0036] 「고문」 경찰 12명 고발/부산 변호사회
조선일보 94.12.24 31면 (사회) 뉴스 436자

【부산=박주영기자】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성래·변호사)는 23일 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8)양 유괴살해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원종성(23)-옥영민(26) 피고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부산 북부경찰서 강력2반장 김모경위(39) 등 경찰관 1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확정했다.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이날 오후 부산 서구 부민동 부산변호사회관에서 회의를 소집, 이 사건 진상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문재인·변호사)의 조사활동을 보고받아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26일 고발장을 접수시키기로 했다.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변호사는 「경찰이 고문을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당초 부산지검에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사건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부산지검이 공정하거나 중립적이지 못하

다고 판단, 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0037】 고문경관 13명 고발/부산 변호사회/가혹행위 증거확보
동아일보
94.12.24 31면 (사회) 뉴스 857자

◎국교생 유괴살해

【부산=장일찬】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성내변호사) 는 23일 『부산북부경찰서 강력계 형사등이 국교생 강주영양 (9) 유괴살인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와 참고인등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날 부산변호사회 회관에서 이 사건 진상조사소위 (위원장 문재인변호사) 로부터 진상조사 보고를 받고 이

같이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변호사회는 이 경찰서 김모경위 (39) 등 12, 13명의 경찰관을 독직폭행및 가혹행위 혐의로 26일 대검에 고발키로 했다.

부산변호사회가 수사경찰관들을 무더기 고발키로 공식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공판과정에서 피의자 4명중 3명에 대한 유무죄공방이 치열한 이번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진상조사소위는 한달간의 조사결과 김모경위등 북부서 강력반 형사들이 지난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원종성 (23) 옥영민씨 (26) 등 이 사건 피의자 3명과 김춘근씨 (23) 등 참고인 7명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조위원장은 『당초 부산지검에 고발하려 했으나 부산지검이 이 사건의 수사지휘와 기소, 공소유지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상부기관인 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 가족등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활동을 폈으며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고문등의 가혹수사가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 고문수사 척결 차원에서 이같이 고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검 송광수차장은 이 사건으로 경찰의 가혹행위가 사회문제화 되자 이달초 부산지검 검사들에게 강력사건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되면 경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0038】 고문혐의 「국교생유괴」 수사경관 12명/대검에 직접 고발키로
한국일보 94.12.24 30면 (사회) 뉴스 319자

◎부산 변협

【부산=박상준기자】 속보=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조성래) 는 23일 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 (8) 양 유괴살인사건과 관련, 26일 부산 북부서 김모 (39) 경위등 수사경찰관 12명을 독직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대검에 고발키로 했다.

인권위원회는 『경찰관들이 고문을 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당초 부산지검에 고발키로 했으나 사건수사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회가 피의자고문과 관련, 경찰관들을 무더기 고발키로 한 것은 극히 이해적인 일이다.

【0039】 검사가 고문여부 확인/부산지검/피의자 몸 살핀후 신문조서 기록
서울신문 94.12.24 22면 (사회) 뉴스 830자

◎부산변호사회, 강양사건 대검에 고발키로

【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은 앞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고문여부를 담당검사가 직접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문근절대책방안」을 마련, 23일 부산지검과 동부지청·울산지청등 부산지검관내 전 검사들에게 긴급 지시했다. 이는 강주영양(8) 유괴·살해사건을 비롯, 최근 경찰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고문·강압수사가 사회문제화한데 따른 것이다.

부산지검은 이 대책에서 『검사들은 형사사건 피의자들이 검찰로 송치돼 오면 반드시 경찰에서 고문및 가혹행위·편파수사 여부를 직접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검찰의 재수사때 피의자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옷을 완전히 벗겨 몸수색을 해 고문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수사과정에서의 고문여부를 반드시 신문조서에 기록하도록 했다.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날 강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인권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조성래 변호사)의 조사활동 보고를 받은뒤 사건을 수사한 부산 북부경찰서 강력과 김종두경위(39)등 이 사건 담당 수사관 12명을 오는 26일 독직폭행및 가혹행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조위원장은 『경찰의 고문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당초 부산지검에 고발키로 했으나 이 사건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부산지검이 공정하거나 중립적이지 못하다』면서 『상부기관인 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원종성(23), 옥영민(25)씨등 피의자들뿐 아니라 이들의 알리바이를 증언하기 위해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에게도 가혹행위를 하고 허위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0040】 「유괴 살해사건」 고문논란/경관12명 고발 결정
국민일보 94.12.24 18면 (사회) 뉴스 410자

◎부산 변호사회... 사법처리 주목

【부산=전인철기자】 부산 만덕국교 강주영양(8) 유괴살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검이 일선검사들에게 고문 근절대책을 하달한데 이어 부산변호사회도 수사담당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최종 결정, 경찰관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3일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 북부경찰서 강력 2반장 김종두경위 (39) 등 담당경찰관 12명을 독직폭행및 가혹행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이날 이 사건 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의 조사활동 보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원종성피고인 (23) 등을 고문한 사실을 확인, 오는 26일 고발장을 접수시키기로 최종 확정했다.

【0041】 고문여부 빨리 규명하라 (사설)
동아일보 94.12.25 03면 (해설) 사
설 1,333자

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양 (8) 유괴살인사건은 재판이 진척됨에 따라 여러가지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피고인 원종성씨 (23) 와 원씨의 고향선배인 옥영민씨 (26) 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양의 이종언니 이양 (19), 이양의 친구 남양 (19) 과 함께 지난 10월 10일 낮 하교길의 강양을 납치 살해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다

그러나 재판이 열리자 이양을 제외한 3명은 모두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단순히 주장에만 그친 게 아니다. 사건당시 판곳에 같이 있었다고 피고인 친구들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특히 원피고인의 경우 다른 공범 3명과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는 시각에 다른 곳에서 시외전화를 했다는 전화통화기록이 변호인에 의해 재판부에 제출됐다.

이들은 또 경찰관들이 다리 사이에 곤봉을 끼우고 무차별로 온갖 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례적으로 첫공판 이들 뒤 재판부의 신체감정이 공개적으로 실시되기도 했다.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이 사건 수사경찰관 1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최근 들어 형사재판중 가장 가열한 검찰과 피고인간의 공방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중 한 사람의 아버지가 재력과 친분을 이용, 증인들을 알리바이조작에 가담시켰으며 고문 또한 피고인들의 허위주장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어느쪽 주장이 옳으며 어느쪽 증거가 진실에 부합되는가 하는 판단은 담당 재판부의 몫이다. 또 가혹행위 여부는 대검이 빨리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재판경과만으로도 형사재판의 당사자 대등주의 원칙의 적용상 배우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경찰과 검찰은 깨우쳐야 한다. 지금까지 형사재판의 당사자대등의 원칙, 원고인 검사와 피고는 지위를 평등히 하고 대등한 공격방어의 수단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재판의 실제상 외면되거나 무시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 재판에서만큼은 다르다. 지난 시대 권위주의 형사절차 아래서는 법문의 규정이야 어떻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 그것도 구속기소되면 그것만으로 기정사실의 힘을 지녔다. 고문의 항변은

푼봉막 킷전에 흘려넘겨졌다. 이제는 그렇게는 안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또 공소사실의 기정화를 반박하고 타파

하는 피고인의 증거수집도 활발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특히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피의자가 고문당했음을 주장하면 신속하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재판의 진척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하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고문사실의 여부를 대검이 빨리 가려내야 한다. 그래야만 한번 기소되면 피고인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던 권위주의시대의 나쁜 타성에서 벗어날수 있다.

【0044】 “피고인 입 재갈물려 구타” /강양 살해사건
동아일보 94.12.27 30면 (사회) 뉴스 578자

◎부산변협, 고문경관 14명 고발장 발송

【부산=장일찬】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성내변호사)는 26일 『부산북부경찰서 김모경위 (39) 등 경찰관 14명이 국교생 강주영양 유괴살인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와 참고인등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인권위는 고발장에서 북부경찰서 강력계 형사등이 지난10월13일이 사건 용의자로 검거한 원종성씨 (23)와 옥영민씨 (25) 등 3명이 범행을 부인하자 13, 14일 이틀간 안쪽 복숭아뼈가 땅바닥에 닿도록 끌어앉힌뒤 경찰봉을 허벅지에 넣고 입에 재갈을 물려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해 범행을 자백토록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10월16일에도 용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경찰봉으로 앞 허벅지를 때리고 구둑발로 차는등의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 원씨등에 대한 경찰고문을 목격한 조승제씨 (31) 등 3명의 공증을 거친 진술서등을 고발장에 첨부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는 김모군 (19) 등 참고인 6명에게도 폭언과 구타등을 해 진술을 번복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0045】 ‘유괴사건’ 고문경관 14명 대검고발/부산변호사회
한겨레신문 94.12.27 23면 (사회) 뉴스 489자

부산 국교생 유괴살해사건을 수사한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강력반 등 소속 경찰관들의 피의자 고문사실을 폭로하는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됨에 따라 대검의 직접 수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성래)는 26일 북부서 강력 2반 주임 김종두 (38) 경위 등 강력1, 2반 12명과 형사6반 2명 등 모두 14명의 경찰관을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인권위는 고발장에서 “진상조사소위를 구성해 이번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심한 구타와 가혹행위 등 고문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참고인들에게도 알리바이와 관련한 번복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과 불공정수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고발장과 함께 고문 목격자 3명과 참고인 6명의 조사기

록이 포함된 이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덧붙여 이날 우편으로 대검에 보냈다. <부산=이수윤 기자>

【0046】 고문은 완전 추방되어야 한다 (사설)

세계일보 94.12.27 03면 (해설) 사설 1,401자

정부가 고문방지협약 가입서를 곧 유엔에 기탁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87년부터 발효된 이 협약에 가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 왔으나 국내 절차를 이유로 미뤄왔다. 그것은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관행이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협약이 정식 발효되면 공무수행자가 고문미수나 고문에 가담했을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협약 가입결정은 국내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유엔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수행자들의 책무가 그만큼 무거워진 것이다. 그렇지만 문명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인권침해사건이 여러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 부산의 한 국민학교여학생 유괴살인사건의 피고인들이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수사관들을 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한다. 진위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밝혀 줄 것이다.

아직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니 시대를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이 5공정권의 붕괴를 가속시킨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과거정권때 정보-수사기관원들이 개인의 인권을 짓밟아가며 수없이 저지른 고문행위를 오늘날까지도 답습한다는 것은 여간 불행한 일이 아니다. 『고문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는 절규가 이 나라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국제적인 망신인 것이다.

일선 수사관들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얼마간의 가혹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통념을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것이다. 유엔고문방지협약은 현행법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가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히로뽕 투약혐의자와 사형을 구형받은 주부피살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등은 수사과정의 가혹행위와 조작이 빚어낸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대명천지에 어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백을 지나치게 재판증거로 삼는 관행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 물적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을 중요 증거로 삼으려 하다보면 가혹행위가 뒤따르기 쉽다. 또 신체적인 고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잠을 재우지 않는 것도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이다. 철야수사가 바로 그것이다. 「새벽 닭이 울어야 사실을 말한다」는 수사관행은 불면이라는 고문을 동원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국가기관이 고문행위를 스스로 근절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인권존중국임을 선언하고 일선에서는 구태를 계속한다면 후진성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유보한 선택조항인

피해망 위한 개인청구권과 국가간의 문제제기권 조항도 멀지않
아 수락해야 할 것이다. 수사담당자를 비롯한 모든 공무수행자들은 가
혹행위가 불법이며 국제협약상 처벌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0047】 유괴사건/검찰서 증언번복 압력/부산

국민일보 94.12.27 19면 (사회) 뉴스 831자 준

◎피고인 가족·증인 세무자료수집·재산뒷조사/검찰 “진행중 다른 재
판 불이익” 위협/부산변협,

고문경관 14명 대검에 고발

【부산=전인철기자】 검찰과 경찰이 부산 만덕국교 강주영양 (8)
유괴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현장부재 증명) 를 주
장한 증인들을 상대로 뒷조사를 하고 증언번복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
났다.

26일 오후 부산지법 제3형사부 (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양 유괴사건 제6차공판에서 원종성피고인 (23) 의 변호인인
박근수변호사는 경

帖 원피고인의 아버지 원철희씨 (56) 가족등의

재산상태 등 뒷조사를 하고 원씨소유 회사인 거성수산의 세무자료까지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경찰이 원피고인이 사건당일 술을 마셨다는 친구 홍
정기씨 (23) 소유의 주점을 찾아가 평균 매상액등 각종 영업자료제
출을 요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피고인이
범행모의일인 10월9일 자신의 아들 운동회에 같이 갔다고 증언한
원피고인의 애인 이모씨의 형부 정재규씨 (37) 에 대해서도 대구지검
으로 불러 위증여부를 조사하고

현재 진행중인 다른 재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증언번복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동주여전 비서학과 정순자교수와 설은희교교 (2
6) 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남모 피고인이 사건당일 시험을
치렀으며 경찰이 주장하는 답안지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성래) 는 26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고문을 한 부산 북부경찰서 강력1, 2반
12명과 형사6반 2명등 모두 14명의 경찰관을 독직폭행및 가혹행
위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0048】 문민경찰도 고문하나 (사설)

경향신문 94.12.28 03면 (해설) 사설 1,224자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가장 변화하지 않은 공조직으로 경찰을 꼽는
사람이 많다. 행정 각 부처가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
응, 낡은 껍질을 벗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경찰은 여전히 구
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부산에서 어린이 유괴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의자의 입에 재갈
을 물려 고문을 하는등 가혹행위를 했대서 말썽을 빚고있다. 그런가
하면 안양에선 12살짜리 국교생을 절도피의자로 몰아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고 자백을 강요해서 경찰관이 가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아직도 우리경찰이 지난날 고문수사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수사기관의 고문행위는 그 수사기법의 비도덕성과 가혹성때문에 선진법치국가에서는 추방된지 이미 오래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선 과거 군사정부를 비롯한 권위주의 시대의 수사기관이 정권유지의 수단이나 수사의 효율성을 구실로 고문행위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수사기관들이 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고문으로 죄를 만들어 감옥에 보내는등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러왔음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또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이 민주화를 앞당긴 계기가 됐던 사실도 잊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경찰이 구시대의 악습을 청산하지 못하고 수사의 불가피한 관행처럼 가혹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화의 참뜻은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데에 있다. 정부가 곧 유엔의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기로 한 것도 한국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국가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우리 경찰이 세계화를 지향하는 경찰, 문민시대에 걸맞은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선 수사관들의 인권의식부터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수사관행상, 또는 범죄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어느정도의 가혹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반인권적 통념을 하루속히 뿌리뽑아야 한다. 고문은 단순한 수사과정에서의 기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침 경찰청장에 이어 경찰수뇌급의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됐다.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의 낡은 의식을 바꾸는 일이다. 법과 질서의 수호자이자 공권력의 첨병인 경찰이 선진화되지 않으면 나라의 선진화나 세계화도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만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0049] 검찰 강압수사/증인에 욕설... 성적 모욕까지/부산국교생 살해사건
서울신문 94.12.28 22면 (사회) 뉴스 559자

【부산=김정한기자】 부산만덕국교 강주영 (8) 양 유괴살해사건과 관련, 경찰및 검찰이 피의자들의 알리바이를 진술한 참고인들에게 강압수사를 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성래변호사) 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된 4명의 피고인중 원종성 (23) 피고인 등 3명의 알리바이를 주장했던 참고인들이 경찰에서 고문을 받은데 이어 검찰에 불려와서도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머리를 맞는등 강압수사를 당했다는 것이다.

변호사회는 또 검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한 10대 여학생까지 학교를 못다니게 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법정증언을 번복할 것을 강요하는등 사건의 실제적 진실 규명보다는 공소유지에 급급하고 있다고

또 『너 같은 놈은 죽여도 사고처리하면 그만이다. 계속 거짓말하면 가족 모두 구속시키겠다』고 협박, 증언을 반복시켰다.

▲이상희 (이상희·19·남피고인 학과친구) 양=한밤중에 연행, 새벽까지 조사하면서 『남피고인이 모두 자백했는데 무슨 거짓말이나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경찰관들이 둘러서서 주먹으로 쥐어박고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

▲옥피고인 친구인 박석주 (25)·임기우 (25) 씨=경찰서로 찾아가 『범행당일 옥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해쓰으나 진술조서조차 받

아주지 않았다. 다시 소환해 『거짓말을 한다. 구속시키겠다』면서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욕설을 했다. 이어 『신문에 내겠다』며 사진을 찍었다.

▲정재규 (36·원피고인 애인의 형부) 씨=법정증언후 검찰에서 친구·고향선배를 통해 『지금이라도 바른말하면 선처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위증혐의로 처벌하겠다』 협박하고 있다.

▲홍정기 (23·호프집주인·원피고인 친구) 씨= 『허위증언하면 인생에 금이 간다. 맥주값이 얼마나. 세무조사를 시키겠다』 영업방해와 함께 협박을 했다.

[0052] 부산 유괴살해사건/경관 14명 수사
조선일보 95.01.05 39면 (사회) 뉴스 235자

【부산=박주영기자】 부산지검 특수부 (김인호부장검사) 는 4일 부산 만덕국교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가혹행위 혐의로 대검에 고발된 부산 북부경찰서 경찰관 14명에 대해 본격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2백여쪽에 이르는 고발장과 고문에 대한 종합조사보고서, 목격자들에 대한 공중서 등을 정밀검토해 9일부터 부산변회 인권위원회 조성래 문재인변호사 등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0053] 유괴사건 고문경관 수사/부산지검 특수부
한겨레신문 95.01.05 23면 (사회) 뉴스 492자

부산지검 특수부는 4일 부산 국교생 유괴살해사건의 피의자들을 고문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관 14명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대검에 접수된 고발장과 조사종합보고서 등 사건 관련자료가 부산지검에 도착함에 따라 이날 김인호 특수부장을 주임검사하고 박기준, 이득홍, 김경수 검사 등 특수부 검사 3명 모두로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주에 사건 관련 기록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오는 9일부터 고발인인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성래 변호사와 진상조사소위 위원장 문재인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은 이어 원종성 (23), 옥영민 (27) 씨 등 유괴살해사건 피고인
4명과 가혹행위를 당한 참고인 지훈성 (17·성지
공고2) 군 등 10
명, 고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조승재 (31) 씨, 고문 상처를 목격
한 유후근 (36) 씨와 이상범 (26) 씨를 불러 자세한 고문 경위 등
을 조사할 계획이다. <부산=이수운 기자>

[0054] 「고문경관」 본격수사/고발변호사 9일소환
경향신문 95.01.05 21면 (사회) 뉴스 402자

【부산】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김인호) 는 4일 강주영양 (8)
유괴살해사건과 관련,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을 고문한 혐의로 고발된
부산 북부경찰서 담당 경찰관 14명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대검으로부터 부산변호사회의 고발장을 넘겨받아 고발내
용을 정밀검토한뒤 오는 9일쯤 부산변협 인권위원회 조성내·문재인변
호사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경위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고발인 조사에 이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원종

베르

3) ·옥영민 (26) 씨 등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과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계 강력2반장 김종두경위 (39) 등 경찰관 14명을 차례로 불
러 고문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경찰관들이 고발내용을 부인할 경우 대
질신문도 함께 펼 계획이다. <박재현기자>

고문 시비 '끝없는 신음'

부산변협 인권위, 강주영양 사건 관련 경찰관 14명 고발

지난해 10월 발생한 부산 만덕국민학교 4학년 강주영양(당시 10세) 유괴살인 사건은 검찰이 구속기소한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부산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지난 12월27일 피고인 및 참고인 들을 수사한 부산 북부경찰서 강력2반 주임 김종두 경위 등 경찰관 14명을 독직폭행 및 감금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해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강압 수사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참고인 이상희씨.

상처를 본 적이 있다는 조승제(32)·유후근(36)·이상범(25)씨 3명을 증인으로 확보해 그 증언에 대한 공증 절차까지 끝마쳤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측에 가장 불리한 증언을 한 조승제씨는 폭력 혐의로 지난해 10월16일 북부경찰서에 구속되어 21일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11월 2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공증인 증서에 따르면, 조씨는 10월16일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자기가 조사받고 있던 강력반 사무실에 들어온 피고인



신체 검증: 지난해 11월2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산변협 인권위원회(위원장 조성래)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인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폭행 및 가혹 행위는 손버릇이 나쁜 특정 경찰관에 의하여 개인적이고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수사에 참여할 수사팀 거의 전원에 의해 광범위하게 행하여진 것'이다. 따라서 '이는 폭행 및 가혹 행위가 고질적이고 관행적이며 구조적으로 자행되었음을 뜻한다'라고 이 고발장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피고발인인 경찰관 14명 각자에 대해서 구체적 범행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14명을 선정한 근거는 피고인들의 기억과 수사기록이다. 피고인들은 14~15명에 달하는 경찰관, 즉 강력반에 속한 경찰관 거의 전원이 수사로 돌아가면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그 경찰관들의 얼굴이나 계

급·성명 등을 기억하지는 못하므로, 인권위원회측은 부득이 수사 기록상 위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을 조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찰관들을 고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발인 가운데 범행과 무관한 경찰관이 있을 수도, 피고발인이 아닌 사람 가운데 범행과 관련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행 가담자들의 행위 및 책임 정도를 가려달라는 것이다.

북부경찰서측은 "증언 조작됐다"

북부경찰서는 구체적 논평을 꺼리면서도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 배수신 형사과장은 "아직 1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처사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피고인 원종성씨(24)와 옥영민씨(26)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문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그로 인해 두 사람 몸에 생긴

4명 중 원종성씨와 옥영민씨가 고문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가 공증한 바에 따르면, 두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원종성씨에게는 경찰관 4~5명이, 옥영민씨에게는 3~4명이 둘러싼 뒤 '이 XX들 너희는 살 필요가 없는 놈들이다. 죽어야 된다'면서 무지막지하게 구타하기 시작했다. 돌아가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꾸조러 앉히고 구두발로 차는 식으로 5분간 마구 때린 후 질문하기 시작했다. 조씨는 또 피고인들이 들어오기 전 강력반 사무실에 경찰관 20여 명이 모여 있을 때 수사 책임자인 듯한 사람이 '애들 진술에 안맞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 총 열여섯 항목에 대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진술을 맞춰야 한다'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공증했다.

이 공증에 따르면, 경찰관들의 첫 신문은 돈을 얼마 요구하였느냐는 것이었다. 두 피의자가 자백한

금액이, 최초로 범행을 자백한 피고인 이현숙씨(20)가 자백한 액수와 맞지 않자 마구 때렸고 이후로도 계속 신문과 구타를 반복했다. 구타하던 도중 한번은 원씨의 두 팔을 등 뒤로 돌려서 수갑을 채우고 무릎 뒤에는 경찰봉을 끼워서 엉거주춤 서게 한 뒤 마구 때리고 짓밟았다. 옥씨에게는 구타한 뒤 쪼그려 뛰기를 시키면서 "제가 거짓말을 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반복해 복창하게 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그 뒤 유치장에 수감돼 있을 때 원종성씨의 상처를 확인한 바 있으며, 원씨가 고문 때문에 결국 범행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며 흐느꼈다고 공증했다.

이같은 증언에 대해 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어이가 없다며 모든 증언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았던 형사계 강력



열렸다. 부산지법은 이 날 검증된 상체를 "재판에 참고로 삼겠다"고 밝혔다.

2반의 김종두 주임은, 증인 조씨가 10월16일 11시에 강력반 사무실로 들어왔다가 오후 1시에 다른 사무실에 있는 형사계 유치장으로 돌아간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김주임은 "고문을 했다면 기자들을 비롯한 외부인 출입이 끊이지 않는 강력반 사무실에서 왜 드러내놓고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게다가 16일 오전이면 그 전에 원씨나 옥씨가 모두 자백하고 난 뒤인데 무엇 때문에 그같은 가혹 행위를 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부산변협 인권위원회가 피고측 증거나 참고인 진술에만 너무 집착한다며 역을 해 했다.

김주임이 제시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장 검증을 끝낸 뒤인 10월18일 오후 6시20~40분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에서 원씨의 부친 원철희씨(장승포시의회 부의장)와 가족·변호사 등 5명이 원씨와 접견할 때만 해도 원씨의 신체에 아

무 이상이 없었다. 당시 원씨를 만난 박근수 변호사는 "형사과장이 원씨의 머리카락을 헤쳐주고 셔츠의 윗 단추를 한두 개 풀고 보라고 한 적은 있지만 수사보고서에 기록되었듯이 원씨의 등이나 팔까지 보여준 것은 아니다. 또 그때는 첫 접견이라 고문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명백한 결론 내려 '악력' 잠재워야

부산변협 인권위원회는 피고인 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던 참고인들 6명에게서도 '경찰서에서 수사관의 폭언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 때문에 애초의 진술을 번복했다'는 증언을 받아냈다. 피고인 남해경씨(20)의 친구 이상희씨(20)는 경찰에서 두 번 진술했는데, 남씨의 알리바이를 주장했던 첫번째 진술을 두번째 진술 때 번복했다고 검찰과

변호사측에 주장했다. 이씨는 10월 15일 자정 무렵에 경찰에 불려가 같은 날 저녁 7시에야 겨우 풀려났다면, 자기가 남씨의 알리바이를 주장하자 경찰은 계속 '나쁜 X' '독한 X' 등 욕설과 '범행을 몰라서 그렇지 알았으면 가담하고도 남았을 X년이다' 라는 식의 폭언을 했다고 한다. 또 목 주변을 몇 차례 손바닥으로 맞았다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알리바이 주장을 번복하자 비로소 풀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들은 이씨에게 강압 수사를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산지검 안춘호 검사에 따르면, 이씨는 애초에 친구의 알리바이를 제시했으나, 친구가 먼저 알리바이 주장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우길 수가 없어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

판사)는 고문 시비가 벌어지자 지난해 11월23일 원씨와 옥씨의 신체를 검증했다. 이 날 검증에서 원씨의 경우 양쪽 손목에 수갑으로 쥔 흔적이라고 밝힌 폭 0.5cm 길이 4cm 가량의 상처가 아문 상태와 왼쪽 무릎 밑 흉터, 왼쪽 둘째 발가락 밑의 피멍 등이 나타났다. 옥씨에게서는 왼쪽 앞 허벅지 부위에 3~4cm 크기의 상처 아문 흔적과 귀 뒤쪽의 상처 등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문에 의한 흔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재판에 참고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날 검증은 수사 시점으로부터 한달이 더 지난 후에 시행되었다.

고문에 대한 수사는 대체로 분명한 결론이 없이 종결되어 왔다. 이 사건이 명백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고문에 대한 공포와 망령은 부활할 것이 틀림없다. ■

부산·蘇成玟 기자



부산경찰서

그들은 진짜 범인인가

부산 국교생살해사건 '결백' · 고문 공방 치열

부 산 만덕국교생 강주영(8)양 유괴살해사건이 피고인 3명의 유·무죄 공방에다 경찰관들의 고문시비까지 더해 판결과 고문수사여부 결과에 따라서는 새해 벽두부터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1월9일로 7차공판이** 끝난 이 사건 재판의 핵심쟁점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원종성(23), 남아무개(19·동주여전 비서1), 옥영민(27)씨 등 3명이 내세운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의 신빙성 여부다. 검찰과 경찰이 결론지은 사건의 틀은 지난해 10월9일 오후 4시경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피콜로커피숍에 '범인' 4명이 모여 1시간 동안 사건 모의를 하고 다음날 오후 1시30분 북구 덕천1동 체스터프라이드치킨 덕천점 앞에서 강양을 유괴한 뒤 오후 5시30분경 중구 부평동 부산은행 부평동지점 뒤 이면도로에서 목졸라 살해하고 주검을 프라이드송용차에 싣고 다니다 다

음날 오후 9시경 강양의 사촌언니인 공범 이아무개(19)양 집에 유괴했다는 것이다.

기소내용 뒤집는 알리바이 잇달아

하지만 원씨와 남양, 옥씨 등 3명이 제시하고 있는 알리바이는 검찰과 경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주범'인 원씨는 같은 달 9일 오후 2시 30분경까지 여자친구 이아무개(24)씨와 함께 대구에 있다가 오후 4시20분경 부산 해운대에도 착해 함께 지내다 밤늦게 다시 대구로 돌아가 이씨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장승포로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대구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오후 1시경부터 이씨의 조카 유치원 운동회에 참석해 일회용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필름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대로 이날 원씨가 자신의 투스타 승용차를 타고 장승포에 와 우연히 만난 옥씨를 태우고 오후 4시경 부산

이번 사건은 종종 문제돼오던 고문·강압수사가 거론되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원씨가 기자들 앞에서 고문으로 인한 상처를 보여주고 있다.

남포동 피콜로커피숍에 왔다면 대구에서 장승포를 거쳐 부산에 오는데 적어도 6시간이 걸려 오전 10시에는 대구를 출발했어야 한다. 하지만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필름은 원씨가 적어도 오후 1~2시까지 대구에 있었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원씨의 이날 해운대 행적도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원씨가 조선비치호텔에 들렀던 오후 4시26분 장승포의 이종사촌 여동생이 보낸 무선호출을 받고 6분 뒤인 4시32분 호텔 공중전화에서 장승포로 전화를 한 사실이 재판부가 한국통신 부산전산국에 사실조사를 한 결과 확인됐다. 또 이날 오후 4시51분~6시5분 사이에 인근 하얏트호텔 커피숍에서 당근주스와 아이스크림을 시켜 마시고 오후 6시25분~7시 22분 사이에 인근 글로리콘도 식당에서 곰탕과 함박스테이크를 시켜 먹은 사실도 전산전표로 확인됐다. 따라서 원씨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해운대에서 빨라도 차로 40~50분 거리인 남포동에서 사건 모의를 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뒤 '남양이 범행 모의를 마치고 원씨와 함께 해운대에 가 호텔과 콘도에서 아이스크림과 함박스테이크를 먹은 사실을 구치소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자랑삼아 얘기했다'는 이양의 진술을 받아들여 원씨의 해운대 알리바이를 깨려 했다. 그러나 시간을 따져 보면 터무니없는 시도임을 알 수 있다.

원씨의 10~11일 행적의 알리바이는 장승포에서 대구의 여자친구 이씨에게 건 시의전화 통화기록과 목격자 29명이 입증하고 있다. 목격자들에게 대해서는 "재력이자 지역유지인 원씨의 아버지에게 돈으로 매수됐거나 안면 때문에 거짓증언을 한 것이어서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통화기록만은 객관성이 인정된다. 통화기록 발신지 조회 결과 원씨가 10일 자신의 집과 아버지가 경영하는 축양장에서 오전 10시29분~오후 6시29분 사이에 6차례, 11일 축양장에서만 오전 11시47분~오후 5시23분 사이에 4차례 대구의 여자친구 집에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오후 3시41분과 3시45분에 장승포시 능포동 소재 공중전화 두곳에서 대구에 전화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은 '집과 축양장 통화기록은 원씨의 어머니나 제3자가 범행을 위해 부산에 간 아들의 행방을 묻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공중전화의 통화기록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으며 원씨는

"어머니가 대구의 전화번호를 모르며 아직 정식으로 소개를 시키지 않아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할 만한 사이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 알리바이가 사건실체의 고리

남양이 주장하는 9일 행적은 이모 이이선(40)씨, 이중사촌동생 지훈성(17·성지공고2)군과 함께 오후 2시30분께 서부터미널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삼천포 외할머니 집에 갔다가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모와 동생, 삼천포의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검찰은 이들의 증언을 묵살하고, 이모 이씨와 동생 지군이 "폭행, 구속위협 등 강압수사를 통해 함께 삼천포에 가지 않았다"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한 법정 증언도 믿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군이 남양의 부탁전화를 받고 어머니 이씨에게도 "누군가 물으면 누나와 함께 삼천포에 간 것으로 얘기해달라"는 얘기를 전한 것으로 작성돼 있는 남양과 이씨, 지군의 삼천포 행적 관련 진술조서는 지군이 부탁전화를 받았다는 10일 오후 6시께는 학교를 마치고 오후 7시에 시작되는 학원에 가기 위해 친구집에 잠시 들른 시간이어서 신빙성을 잃고 있다. 범행 당일 관련자들의 행적이 모두 남양의 것을 중심축으로 짜여져 있다는 점에서 남양의 알리바이는 이 사건을 푸는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다.

남양이 이날 오전 9시께 학교에 와 11시부터 원종성씨의 9일 행적 양측 주장

검찰	
오전 10시	대구 출발
오후 2시	장승포 출발
오후 4시	피콜로다방
오후 5시	해운대행
오후 6시	하얏트호텔 글로벌리콘도

변호인	
오전 내내	대구
오후 1시30분	유치원 운동회
오후 2시30분	대구 출발
오후 4시20분	부산 도착
오후 4시26분	조선비치호텔
오후 4시51분	하얏트호텔
오후 6시25분	글로벌리콘도
오후 10시	부산 출발 대구행

남양의 10일 행적 양측 주장

검찰	
오전 9시	한문수업
오전 11시	사무영어회화시험
오전 11시30분	지하철 대티역
오후 1시30분	체스터프라이드치킨
오후 2시20분	학교로 돌아와 학교
오후 2시36분	국민은행 괴정동지점
오후 3시	가위손미용실
오후 3시45분	에밀커피숍
오후 4시10분	화가의딸 커피숍
오후 5시30분	부산은행 부평동지점 (강양 살해)
오후 6시15분	가위손미용실

변호인	
오전 9시	한문수업
오전 11시	사무영어회화시험
오전 11시30분	타자실
오후 1시30분	타자시험
오후 2시20분	시험치고 학교
오후 2시36분	국민은행 괴정동지점
오후 3시	가위손미용실
오후 3시45분	에밀커피숍
오후 5시40분	에밀에서 나눔
오후 6시15분	가위손미용실

11시30분까지 영어회화시험을 친 것과 오후 2시 20분께 타자시험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제출한 사실, 친구 이상희(19)양과 함께 오후 2시36분에 학교 인근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은 뒤 시내버스를 타고 중구 부평동 가위손미용실에 간 사실, 오후 3시45분께 혼자 미용실을 나와 남포동 에밀커피숍으로 가 남자친구 김대휘(19)군을 만나고 오후 6시15분께 다시 미용실로 돌아온 사실 등은 검찰도 인정한다.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시간대는 오전 11시30분~오후 2시20분 사이와 오후 4시5분~5시40분 사이이다. 검찰은 남양이 오전 11시30분 회화시험을 마치고 서둘러 학교 인근 지하철 대티역 앞으로 가 승용차를 타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원씨와 옥씨를 만난 뒤 함께 유괴장소인 체스터프라이드치킨 앞으로 가 오후 1시30분께 강양을 유괴한 뒤 오후 2시께 다시 대티역으로 돌아와 학교 언덕길을 급히 올라가 2시20분께 친구 이상희양이 대리작성한 타자 답안지에 이름만 적어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타자시험 답안지를 대리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이



유치원 어린이들의 민속공연. 9일 오후 1시10분~15분께로 확인된 이 사진은 원씨가 적어도 오후 1~2시까지 대구에 있었음을 증명해 "오전 10시에는 대구를 떠났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뒤엎고 있다.

양은 시험시간 10분 안에 두 사람이 친 답안지 분량만큼의 영문타자를 칠 만한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도교수에 의해 확인됐고 이양 뿐만 아니라 30여명의 학생들이 남양이 시험을 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자다가 날벼락 맞은" 옥씨

남양이 남자친구 김군을 만난 시간이 오후 3시 45분~5시40분 사이의 2시간이 아니라 20분이며 김군과 헤어진 뒤 커피숍 화가의 딸로가 '공범들'을 다시 만나 강양 처리문제를 의논하다 오후 5시30분께 부산은행 부평동지점 이면도로에서 이뤄진 강양 살해에 가담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김군은 법정에서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강압수사를 하면서 애

초 진술을 번복시켰다"고 밝힌 데다 김군은 검찰 조사 때는 남양을 만난 시간이 2시간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남양이 이날 커피숍을 나오기 전인 오후 5시40분께 미장원에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고 밝혀 재판부가 신청한 통화기록 사실조회에서 이 사실이 확인되면 남양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거짓이 되고 경찰이 김군에게 가한 강압수사도 객관적으로 입증되게 된다.

옥씨는 이번에 북부경찰서로 연행되기 전에는 한번도 만난 적이 없어 얼굴도 모르는 어린 여자들과 범행을 한 격이어서 유·무죄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인물이다. 옥씨는 사건 당시 결혼을 약속한 여인과 동거를 하면서 동거녀가 임신중이어서 '유홍비 2백만원 마련을 위한 철없는 X세대의 지존과 모방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현장 검증 때 처음 태중대를 가봤다"고 진술한 옥씨는 밤늦게까지 장어구이 장사를 하고 낮에는 잠을 자는 생활을 해 오하려 검찰이 믿으려 들지 않는 증인들 말고는 알리바이가 없는 형편이다. 다만 옥씨가 '김철민'이라는 가명을 쓰고 다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내세운 증인 변형식(22)씨가 법정에서 "철민이라는 가명을 쓰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혀 '김철민'으로 조작됐다는 사실은 밝혀졌다.

앞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으로 결말날 것인지 크게 주목된다. ㉓

부산=이수윤 기자/한겨레신문 민권사회부

'부산 유괴살해'와 공정한 판결

95. 1.24

한겨레

부산 만덕국고생 강주영양을 유괴해서 살해하는 데 가담한 '범인'이 이종언이라는 경찰의 발표가 나왔을 때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범인이라는 혐의를 받아 구속된 다른 두 청년도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의 아들이거나 그런 끔찍한 행위를 저지르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인물이어서 충격이 더 컸다. 그러나 경찰이 그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했다는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고 검찰의 기소가 무리라는 언론의 보도가 계속되자 중대한 인권 유린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크게 일었다.

애초 경찰이 정황증거에만 기대어 피의자들을 구속하자 알리바이를 비롯한 여러 반박자료를 근거로 그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1백명 가까이 나타났다. 그리고 구속기소된 4명의 피고 가운데 세 사람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고문을 당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담당재판부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는 두 피고를 불러 신체검증을 하고 고문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의 이런 이례적 조치에 이어 부산변호사협회는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에게도 범인이 조작되었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증언과 증거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데도 검찰은 완강하게 "공소 유지에 자신 있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억지이고 허점이 많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며칠 전에 나왔다. 재판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범'이라는 남아 무개양이 검·경이 주장하는 살해시간에 친구와 통화한 기록이 전화국에서 확인된 것이다. 검·경은 최일선 국가권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공정한 수사를 해서 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번 부산사건에서는 수사의 과학성도 구체적 물증도 보기 어렵다. 피의자들 자백을 받아 내기에 급급한 원시적 수사가 범인 조작 의혹만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을 뿐이다.

재판장인 박태범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한 용기있는 법관으로 '한국의 포청천'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결심공판이 어제 열렸고, 선고는 2월6일에 있을 예정이다. 지금 피고들의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그들의 무죄 입증을 위해 애쓴 사람들은 그날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이다. 재판부가 이제까지 나온 검찰과 변호인쪽의 주장을 현명하게 판단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고 기대한다.

95. 1. 25 2월 22

□ 유괴살해사건 극형구형 이모저모

조작논란 이틀간 치열한 공방

사실심리 6시간30분...구형 이례적 하루연기

부산/이수윤 기자

○...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공판은 막판까지 치열한 유·무죄공방이 계속돼 23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사실심리가 휴정없이 저녁 8시30분에야 끝나는 바람에 이날로 예정됐던 검찰의 논고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하루 연기돼 24일 오후 1시30분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애초 23일 결심까지 마칠 계획이었으나 뜨거운 공방으로 공판이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날 것으로 판단되자 전격적으로 구형 등을 하루 연기했다.

○...부산지검 형사2부 김재경 검사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 가족 등의 극단적 이기심과 언론이 피해자의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한 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증인들이 거짓증언을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논고과정에서 다섯차례나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호 변호사는 이에 맞서 "사건이 진행될수록 납득할 수 없는

사실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언론의 추적보도가 이루어졌는데도, 수사를 잘못된 검찰이 문제점을 보도한 언론을 탓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최후변론에서 이 변호사는 "검찰은 증인 모두들 유괴살인범마저 옹호하는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며 "만약 유죄가 나면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은 우리나라 최대의 공기업이자 공공기관인 한국통신까지 조작의 공범으로 몰고 있다"며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 역사를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강주영양의 이종사촌언니인 이아무개양이 자신의 집에서 강양을 살해한 뒤 유괴사건으로 꾸몄으며, 그 뒤 이양의 각본에 따라 수사기관이 춤을 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를 토대로 강양의 주검은 경찰이 발견할 때까지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없으며, 남자의

목소리였다는 강양 어머니의 진술에 매달려 협박전화를 한 남자가 따로 있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양이 목소리를 꾸며서 전화를 해도 10대 후반의 가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이양의 단독범행을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원종성, 남해경 피고인은 각각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손톱만큼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담담하게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을 범인으로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 피고인은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나는 뉘우치지 않는 이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진술해 후시나 하며 '양심 선언'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방청석에서는 장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21일부터 시작돼 신정연휴를 빼고는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된 이 사건 공판은 증인이 무려 85명에 이르고 공판 때마다 평균 2백명의 방청객이 지켜봐 부산지법 관내에서는 지난 89년 동의대사건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으로 기록됐다.

‘조작의혹 피고’ 사형구형

부산지검, 유괴사건 3명엔 무기

95. 1. 25

부산 만덕국고생 강주영양 유괴 살해사건의 피고인 4명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오후 1시30분부터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형사2부 김재경 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종성(23)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남아무개(19)·육영민(27) 피고인과 강양의 이종언내인 이아무개(19) 피고인 등 3명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원 피고인 등 무죄를 주장해온 피고인 3명은 죄질이 무거운 순서대로 고문을 통해 사건이 조작됐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가족 친지들까지 가세해 거짓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가증스러움을 보였다”며 “원 피고인은 주범이어서 극형이 마땅하며, 남·육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고, 이 피고인은 가담 정도는 무거우나 반성을 하고 있어 형량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쪽이 제출한 사진과 통화기록은 사진전문가와 한국통신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타자시험은 대리시험이 분명하고, 취재기자까지 참고인에게 알리바이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알리바이(현장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를 모두 부정했다.

박근수·이재호·이혜진 변호사는 “이 피고인 집에서 강양이 살해돼 주검이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 사건으로, 이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능성이 높은데도 수사기관이 이양의 자백만 믿고 고문 등을 통해 무고한 3명을 범인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이 피고인까지도 원·육 피고인이 경찰에서 여러차례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봤다고 밝히고 있을 만큼 수사 경찰관들의 고문 사실이 명백하다”며 “한심한 고문수사의 작태는 하루속히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형이 구형된 원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고문경찰관들이 법정에서까지 거짓말을 하고, 검사도 여기에 맞장구를 쳐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을 보고 양쪽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부산/이수윤 기자

‘유괴사건’ 선고 연기

검찰쪽 변론재개 요청 따라 전면 재심리

15.
2.7

부산 민력국교생 강주영양 유괴 살해사건의 선고공판이 검찰쪽의 변론재개 요청에 따라 연기돼 오는 13일부터 사실심리가 재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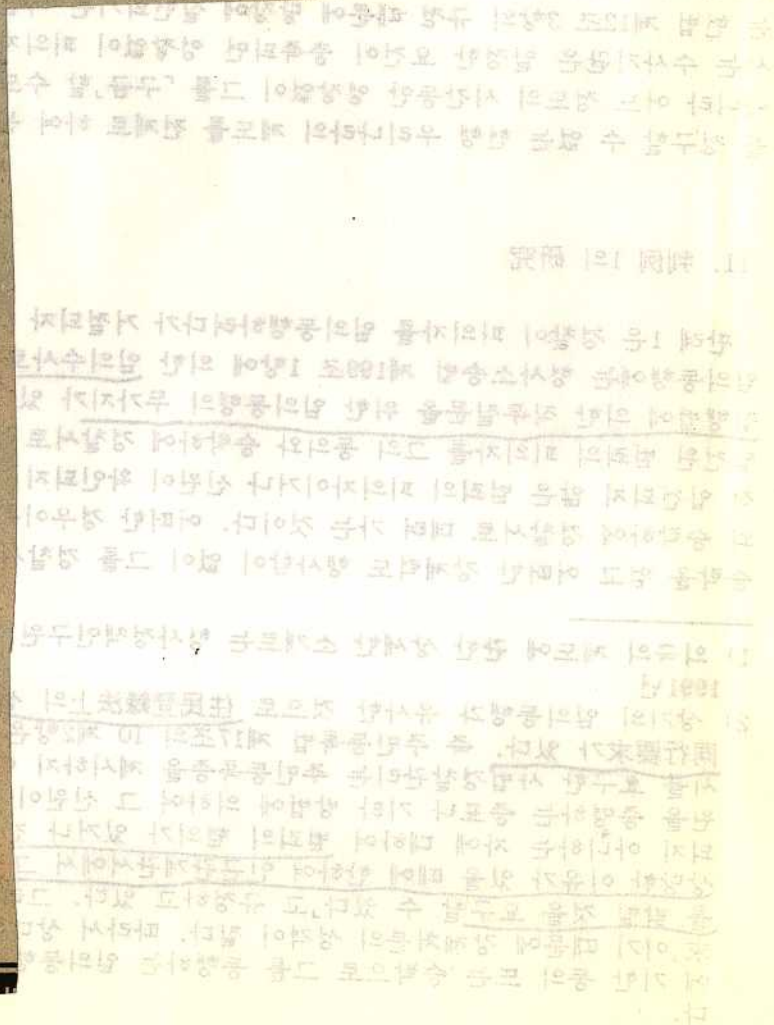
이 사건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3 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6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공판에서 “검찰쪽이 범행 차량에서 채취한 머리카락에 대한 서울대 법의학교실의 감정 결과 13개가 피해자 강주영양의 것과 사실상 같다는 소견서가 도착해 이를 근거로 변론재개 요청을 해와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쪽이 신청한 서울대 법의학교실 연구원 신창호(31)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증거로 제출된 머리카락의 수거 절차와 변호인쪽이나 피고인 가족 등의 참석 여부 등에 대한 증언도 들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 조작되고 원종성(23)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용한 휴대폰의 통화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검찰 주장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법의학교실은 “미토콘드리아 디엔에이 염기서열 분석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의 염기서열이 숨진 강양의 머리카락과 같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이수윤 기자



95. 2. 7

□ 사실심리 재개된 국교생 유괴살해사건

‘유전자 감정’ 막판공방 치열할듯

부산/이수윤 기자

6일로 선고가 예정됐던 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재판이 유전자감정 결과가 막판에 돌출됨에 따라 또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됐다.

검찰은 범행 물증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자 지난 10월 26일 범행에 사용됐다는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채취한 60여점의 머리카락 가운데 32점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대검 중수부 유전자감식실에 의뢰해 11월 15일 결과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감정 결과가 자신들이 바랐던 것과 다르게 나오자 12월 12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모근이 없는 머리카락이 많아 감정 결과가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모근이 없는 머리카락

의 감정도 가능한 서울대 법의학 교실에 재감정을 의뢰하겠다”고 요청해 재판부는 12월 15일 서울 대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 감정서가 5일 법원에 도착하고 검찰이 6일 변론재개를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사실심리가 재개돼 유전자 감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서울대 법의학교실이 보내온 감정서의 요지는 머리카락 13점과 2점의 일부에서 각각 미토콘드리아 디엔에이 염기 서열이 숨진 강양과 이이무개양의 것과 같은 것이 추출됐다는 것이다.

직접 분석실험을 한 연구원 신창호(31)씨는 “대검이 사용한 핵추출방식은 오차가 1억분의 1로 정확도가 높지만 최근 도입된 미토콘드리아분석법은 표본조사 결

과가 없어 분석결과를 가지고 같은 사람의 머리카락이라고 결론 자체를 내릴 수도 없고 이 분석법이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 이번 감정서에 의존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대검 유전자감식실 이승환 실장은 “모근이 있는 것과 없는 머리카락을 섞어 분석했기 때문에 우리 연구실의 분석 결과를 두고 강양 등의 것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서울대의 분석 결과를 놓고도 강양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고집하고 있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놓고 대검이나 서울대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관한 한 유·무죄를 판단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95.2.6

□ '유괴살해사건' 유전자감식법 증거능력 관심

DNA감식 충분한 표본자료없어 신뢰의문 비교분석위해 다수 유전자 통계등 필수적

양상우 기자

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행차량에서 채취한 머리칼라에 대한 서울대 법의학교실의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감정에 사용된 유전자감식법(미토콘드리아DNA법)과 그 결과의 증거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간의 유전형질을 지배하는 염색체는 대부분 동일하지만 특정부분에는 개인별 특징을 나타내는 변이형질이 분포돼 있다. 유전자감식의 원리는 이 변이부위를 분자생물학적 기법에 의해 10만~1억배 크기로 증폭시켜 사람마다 다른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때 증폭된 염색체의 DNA 염기서열은 마치 상판에 찍

혀 있는 바코드와 유사하다.

이런 유전자감식법에는 세포 안에 있는 핵DNA와 미토콘드리아DNA를 분석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법의학교실이 사용한 방법은 악조건 속에서도 DNA 추출이 용이한 미토콘드리아DNA법.

서울대법의학교실은 5백~6백 개가량의 염기서열을 갖고있는 한 과변위부위에서 읽어낸 2백70여개의 염기서열이 숨진 강양및 용의자 이아무개양의 것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감정결과를 신뢰하는 데는 다수의 일반인들에게서 채취된 염색체를 이용해 조사된 유전자통계 등 비교데이터가 필수적이다. 한국인들이 염색체에 갖고 있는 변이형질의 분포

등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이번 감정결과를 객관적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의학자들의 이야기다. 즉 극소한 DNA염기서열을 수억배로 증폭시키는 과정에서 자칫 티끌만한 오류까지 함께 증폭시킬 수 있으며, 게다가 오류를 잡아낼 통계 자료도 없이 이뤄진 감정결과를 100% 신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국내 최초로 지난해 미토콘드리아DNA분석법을 이용해 20년 지난 유괴의 신원을 확인했던 고려대 법의학교실 황적준 박사도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도 DNA 염기서열이 동일하게 나타난 적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를 통한 비교자료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조작의혹 유괴사건

내일 선고공판 열려

범인조작 시비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의 선고공판이 6일 오후 2시 부산고법 103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 사건 재판의 선고 결과는 쟁점이 돼온 △강양의 이중사촌 언니인 이양의 단독범행 △마그네틱 테이프 조작을 통한 피고인들의 전화통화기록 조작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및 이를 입증한 법정증언의 진위 등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 부산/이수윤 기자

25

고문·짜맞추기 수사 범인 민

조작 논란 국교생 유괴살해사건 수사 전말

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양 유괴 살해 사건이 23일 열릴 9차 공판으로 심리가 모두 끝나고 구형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범인조작 논란은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재판부의 선고공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사건은 경찰 발표 당시 이종사촌 동생을 유괴살해하고 신세대들이 지존파를 모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으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기소 뒤 공판이 진행되면서 경찰의 고문을 통한 짜맞추기 수사와 검찰의 억지 공소유지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의 전말과 성격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앞으로의 전망 등을 방담 형식으로 정리해본다. 편집자

— 지난해 10월 10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부산 북부경찰서는 12일 오전 11시 강양의 이종사촌 언니인 이아무개(19)양을 유력한 용의자로 연행해 자백을 받아낸 뒤 잇따라 '공범' 3명을 검거했을 때까지만 해도 검경의 당시 표현대로 사건이 의외로 술술 풀려나 갔다.

강압된 '자백'만 의존

하지만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된 14일부터 이상한 조짐이 일어났다. 다른 강력사건과는 달리 이양을 뺀 3명의 가족과 친구들이 경찰서로 찾아와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주장은 유괴 살해라는 사건의 미묘한 성격 때문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경찰과 일부 언론으로부터는 "유괴 살인범도 비호하는 집단이기주의 세태"라고 매도되기도 했다.

— 자칫 묻혀버릴 뻔했던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의 끈질긴 추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진 뒤부터 조작 여부를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전으로 비화됐다.

검찰이 4명 모두를 진범으로 판단하게 된 데는 이양의 친구 남아무개(19)양이 검찰의 기소 바로 전까지 이양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계속한 것도 크게 작용했

다. 검찰은 이양과 남양민을 이 사건을 담당하지 않은 최윤희 검사에게 별도로 조사하도록 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하자 기소 방침을 굳혔다.

— 대검도 현재까지 부산지검의 수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 초기 언론에 의혹과 함께 재수사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하자 부산지검장으로 부터 직접 "원씨 등이 범인임이 틀림없으며 언론보도는 경찰과의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요지의 보고가 왔다는 것이다. 이 보고에 따라 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아무 할 일이 없다"는 태도를 밝혀왔다. 애초 "아무래도 이 사건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던 대검의 한 관계자도 언론에 남양 등의 알리바이 주장이 집중 보도되면서 직접 수사기록을 구해 검토해보고는 "부산지검에서 정말 철저하게 수사했더라"며 "범인임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 나름대로 노력은 했으나 관련자들이 진범이라는 전제 아래 조사를 계속한 것이 대세를 그르치게 된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다.

— 검찰과 경찰의 이번 사건 수사는 철저하게 자백에 의존했다. 이 때문에 부검을 실시하면서 강양의 사망추정시간도 밝혀내지 못했으며 강양을 살해한 뒤 주검을 싼 꽃무늬 이불호청도 태워버리는 등 증거 수사를 외면했다.

— 경찰도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처럼 정해진 결론을 향해 치달기는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10월 16일 이미 하얏트 커피숍을 찾아가 원종성(23)씨의 진술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전산전표를 확인해 놓고도 이를 묵살했다.

원씨의 여자친구 이아무개(24)씨 집에 찾아온 경찰은 이씨가 원씨의 알리바이 물증으로 사건 모의일인 10월 9일 조카 유치원운동회에 참석해 찍은 1회용 카메라를 필름이 든 채로 건넸었으나 "필요 없다"며 내팽개치고서는 공판과정에서 이 사진마저 조작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기소 뒤에도 검찰은 언론이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사실 여부를 편견없이 가려내기보다는 설득력있는 반론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도 억지 주장이라고만 몰아붙였다.

— 원씨가 모의시간에 해운대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물증이 드러나



검경 '결론' 미리 내린뒤 물증 철저 언론 의문제기에 "조작공범" 억지

남양과 함께 해운대에 갔다"는 이양의 진술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단독범형 의혹을 사고 있는 이양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이양은 검찰의 진술 조서에서 "당시 원씨와 남양이 커피숍을 나와 해운대쪽으로 가기 위해 남포동 지하도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으나 공판 때는 "커피숍을 나와 내가 가장 먼저 집으로 갔다"고 밝혀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다.

— 검찰은 원씨쪽이 알리바이의 물증으로 사진 27장과 필름 원본을 제시하자 이 또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은 원씨

개동 40가구 가운데 태극기를 내건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점에 착안해 "40~50% 정도가 태극기를 달았다"는 주민과 청소년 등 2명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스스로 눈귀 틀어막아"

— 사진에 나타난 주차 차량을 보면 사진을 찍은 날이 공휴일이 분명하고 원씨가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의 배경에 나오는 대구 문화방송 조아무개 아나운서도 "점심을 먹고 난 뒤 1~2시 사이에 찍힌 사진이며 사진을 찍을 때 '나도 엑스트라로 나오겠네'라고 얘기한

성은 입증됐다. — 하지만 검찰은 또 조 아나운서가 찍힌 사진 자체가 합성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폈다. 사진 전문가들은 필름 자체를 합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진을 따붙이기 형식으로 합성하면 쉽게 표시기나 "검찰의 주장은 상식 이하의 억지"라고 지적했다. — 한국통신 부산전산국의 마그네틱타이프가 조작됐다는 검찰의 주장도 억지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통화기록 조작 여부 대책 수사를 하면서 지난

고문 흔적

강주영양 유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옥영민씨가 지난해 11월 부산지법 박태범 부장판사실에서 고문 흔적 부위를 담당 판사와 변호사, 보도진에게 보이고 있다.

15개항에 "일부 불가"라 통속"이 한국 과학수사 하고 있 들이 믿 이증성을 발하는 - 검경 현실적으 제시하고 주체와 한 상태 문에 재 인정받기 조작 주 하기 위 지 피고 신빙성을 서 주장 들은 보 - 사건 벗어난 경에 대 고 있다. 확인된 에서 흘 '범인' 4 서 지존 기 전에 을 조속

구속 연행 법률구조

오늘의 당직 변호사
이석우 백형구 심창주
오재창 이경익

전화 : 02-597-1919

팩스 : 02-597-2929

지역	서울
대전	충주
춘천	강릉
전주	광주
제주	대구
부산	

악추기수사 범인 만들기 충격

조작 논란 국고생 유괴살해사건 수사 전말



고문 흔적

강주영양 유괴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옥영민씨가 지난해 11월 부산지법 박태범 부장판사실에서 고문 흔적 부위를 담당 판사와 변호사, 보도진에게 보이고 있다.

15개항에 대해 한국통신 본사에서 "일부 내용의 변경 또는 삭제는 불가"라는 회신을 받고도 "같은 통속"이라며 믿지 않았다.

한국통신 관계자들은 "검경이 과학수사방식의 하나로 지주 사용하고 있는 통화기록에 대해 자신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검경의 조작 주장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가능성만 제시하고 있을 뿐 조작을 실행한 주체와 경위는 전혀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의해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조작 주장은 객관적 진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단지 피고인들의 알리바이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변호인들은 보고 있다.

-사건 초기에 검찰이 상식에서 벗어난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그럴 듯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경찰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북부서가 '범인' 4명을 검거한 뒤 청와대에서 지존파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 전에 발생한 유괴사건의 범인을 조속하게 검거한 것을 치하하

는 전화를 걸어와 알리바이가 있따르는데도 수사 방향을 돌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범인 검거 일주일 뒤인 10월21일이 경찰의 날이어서 이날 표창을 받기 위해 북부서가 범인만들기에 주력했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부서 배수신 형사과장은 황용하 부산경찰청장이 표창 상신 보류 지시를 했음에도 개인적으로 로비를 해 결국 표창을 받게 됐으며 이 때문에 황 청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사실은 부산지검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내부에서도 수사의 문제점을 알고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 차례 제시됐으나 황 청장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부산경찰청 고위 관계자가 '황 청장의 고집 때문에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이 부풀려졌다'고 밝힌 사실이 기자들에게 전해져 알려졌다.

법원주변 "검찰 역부족"

-검찰 역시 위신의 추락을 막을 기회가 많았으나 스스로 눈과 귀를 틀어막는 바람에 일을 그르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 주변에서는 재판부와 변호사, 취재기자들이 지역유지인 원씨의 아버지에게서 엄청난 돈을 받았다는 악성 루머가 끊임 없이 흘러나왔다.

또 검찰은 증인들이 마치 돈에 매수돼 거짓증언을 한다고 맹신해 공판과정에서 해상교통편은 여객선밖에 없는데도 "원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 배를 타고 거제에서 부산에 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해 방청객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번 사건의 수사과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유리

한 증언을 한 1백여명의 목격자들을 모두 알리바이 조작의 공범으로 몰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자신들을 뺀 전 국민을 조작의 공범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가 고문 경관 14명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자 검찰 수뇌부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이해관계자인 부산지검에 수사를 맡기자니 여론이 부담스럽고 대검 중수부가 직접 수사를 하자니 부산지검쪽의 눈치가 보인 것이다. 결국 고소인인 부산변협이 고소장에서 "부산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한발 물러선 것을 '원군'으로 삼아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하도록 하면서 총장 특별지시를 덧붙이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고문경관들을 부산지검에서 수사하도록 한 데 대해 대검 관계자도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원씨 등을 기소한 부산지검 형사부의 목표는 고문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특수부는 그 반대여야 하는데 부산지검에서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검찰이 역부족이 아니냐는 것이 법원 주변의 얘기다.

검찰이 믿는 것은 피고인들의 자백과 객관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각종 알리바이의 조작 주장뿐이고 변호인쪽은 무죄를 주장하는 3명 개인마다 술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 담당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지난 17일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소신있게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리자, 선고공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검찰로서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정리/이수윤 기자

'결론' 미리 내린뒤 물증 철저히 외면 의문제기에 "조작공범" 억지 주장

었다"는 이 개동 40가구 가운데 태극기를 내렸다. 그 건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점에 착을 사고 안해 "40~50% 정도가 태극기를 거짓말이 달았다"는 주민과 청소년 등 2명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스스로 눈 귀 틀어막아"

-사진에 나타난 주차 차량을 보면 사진을 찍은 날이 공휴일이 분명하고 원씨가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의 배경에 나오는 대구 문화방송 조아무개 아나운서도 "점심을 먹고 난 뒤 1~2시 사이에 찍힌 사진이며 사진을 찍을 때 '나도 엑스트라로 나오겠네'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다"고 밝혀 사진의 신빙

성은 입증됐다.

-하지만 검찰은 또 조아무개씨가 찍은 사진 자체가 합성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폈다. 사진 전문가들은 필름 자체를 합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진을 따붙이기 형식으로 합성하면 쉽게 표시가 나 "검찰의 주장은 상식 이하의 억지"라고 지적했다.

-한국통신 부산전산국의 마그네틱타이프가 조작됐다는 검찰의 주장도 억지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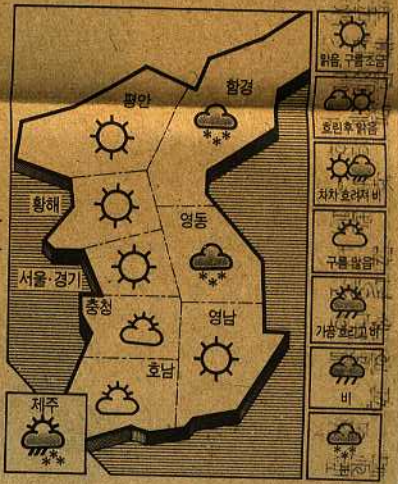
검찰과 경찰은 통화기록 조작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지난해 1월 5일 북부경찰서가 질의한



다시 추워지려나

은나라 구름조금 끼쳤고, 영동지방과 제주도 는 한때 눈 또는 비, 아침기온 -6~1도, 낮기온 0~7도로 어제보다 낮겠음.

지역	날씨	기온	눈비확률		해돋이 07:42	해넘이 17:45
			낮	밤		
서울	구름 조금	-3~2	20	10	달몰이 --	달넘이 11:00
대전	가끔 구름 많음	-2~4	20	10	안바다	풍향 풍속/파고(m)
청주		-2~3	20	10	서해중부 북서북동	9~12/2
춘천	구름 조금	-4~1	20	10	서해남부	12~16/2
강릉	대체로 흐림	0~4	40	20	남해서부	12~16/2
전주	가끔 구름 많음	-2~5	20	20	남해동부	9~12/1.5
광주		-1~5	20	20	동해남부	9~12/2
제주		4~7	30	20	동해중부	9~12/2
대구	구름 조금	-2~5	10	10	◇ 물때 만조 09:12/21:29 (인천) 간조 02:58/15:16	
부산		1~7	10	10		



조망 12/22/94 (21)

부산 변호사회 인권위원

【釜山】

朴柱榮

자 부산

변호사회

인권위원

회 21

일 부산

만민교회

姜周英

(501-780)

8)양유

괴삼해사

건과 관

련, 元鍾

聲(원중

삼·88)피

고인 등

2명에

대한 조

사과정에

서 기록

행위를 한 혐의인

우(40)등 부산북부경찰서

강림반 형사 108명

검찰에 고발기도 했다.

인민위에서 이를 위해

유기 88년 혐의를 소지

경찰위원의 기록은 일부의

대한 진상주사를 벌였던

산하 진상조사위원회의 위

원장 文在寅(현장)의 보

고를 뜨고 고발대상으로

경찰위원 2명에게 절차를

거친 뒤 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민위에서 이와관련

이 사건이 재판에 계류중

이라고 믿을 했지만 피고

인들의 유무죄와 상관없

이 경찰위원의 수사과정상

가혹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판단에서 고발키

로 했다고 밝혔다.

밝히고 있다.

남모 (19) 피고인이 사건 당일날인 지난 10월10일 타자시험을 치는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남양의 급우 이모 (19) 양은 같은달 28일 부산지검 담당검사실로 불려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당장 구속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머리와 가슴을 주먹으로 맞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인 언행까지 당했다』는

【0050】 강양 사건 부산변호사회 고문 고발 내용

중앙일보 94.12.28 21면 (사회) 텍스트 1,597자

◎수갑 채운채 원산폭격/귀 끌어당긴뒤 플라스틱자로 톱질/고문장면 보여주며 허위자백 강요

부산 강주영양 유괴. 살해사건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고문. 협박. 강압수사. 증언반복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문. 협박을 받은 피고인과 참고인만도 무려 13명. 부산 지역 변호

사회 인권위원회가 부산 북부경찰서 강력1. 2반과 형사6반 소속 경찰관 14명이 저지른 고문. 강압수사 내용을 조사해 26일 대검에 제출한 고발장 내용을 요약한다

▲원종성 (원종성·23) 피고인=수갑을 등뒤로 돌려 채우고 손을위. 아래로 올려 마구 흔들었다. 또 수갑을 채운 채 원산폭격을 시킨뒤 앞·뒤로 기계 하거나 한쪽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게 했다. 이런 가운데 가슴·복부·뺨·허벅지등을 마구 차고 때렸다.

또 장판지 사이에 경찰봉을 끼운뒤 복숭아뼈가 완전히 바닥에 닿게 꿰어앉히고 구둣발로 마구 짓밟았다.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린 뒤 무차별 구타했다.

▲옥영민 (옥영민·26) 피고인=경찰봉을 무릎뒤에 끼우고 엉겨주춤한 자세로 서게 한뒤 허벅지·다리등을 구둣발로 마구 찼다. 또수갑을 채워 꿰어앉힌뒤 눈을 가리고 마구 짓밟았다.

이 상태에서 귀를 끌어당긴뒤 플라스틱자로 톱질 피가 줄줄 나게 했다. 제자리 뛰기를 시킨뒤 『거짓말을 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라고 복창하게 하고 소리가 작아지면 마구 걷어찼다.

▲남모 (19·여·D여전비서과1) 피고인=원·옥피고인이 고문받는장면을 목격하게 해 겁에 질리게 만들고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이어 『검찰은 경찰보다 더 무서운 곳이다. 바른 말을 하면 밖에서 사람이 들어와 죽인다』며 검찰의 재조사때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김춘근 (김춘근·24·프라이드승용차주인) 씨=경찰에 연행되자마자 턱과 얼굴등을 마구 얻어맞아 경찰에서 풀려난 뒤 3~4일간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다. 범행을 계속 부인하자 『원피고인이 벌써다 자백했는데 거짓말한다』며 발과 주먹으로 온 몸을 때려 정신을 잃었다.

▲지훈승 (17·성지공고2·남피고인 이종사촌동생) 군=한밤중에 경찰로 연행된뒤 킁킁한 방에 가둬놓고 『남피고인과 범행모의했다는날 삼천포에 갔다』고 진술하자 뺨·목뒷덜미를 마구 때리고 입에담지 못할 욕을 했다.

73년도

- 11. 26: 국제사면운동위원회 60개국 실태보고서

83년도

- 4. 5: 고문방지 특별법 제정논의 (민한당)

86년도

- 7. 7: 고문백서 내기로 (민추협 상임위)
- 8. 14: 정당집회방해는 공권력 남용 (고문성고문 용공조작 범국민폭로대회)
- 8. 14: 민주 사무실 수색
- 8. 14: 고문폭로대회 강행
- 8. 15: 폭로대회 신민당주변 차단
- 10. 29: 중공, 고문근절 지시

87년도

- 1. 9: '전세계 고문 발간' (성철용)
- 1. 15: 횡설수설 (1. 19, 22)
- 1. 20: 고문추방 긴급 좌담회
- 1. 21: 고문근절 새입법 검토
- 1. 22: 고문의 종식을 위하여 (사설)
- 1. 23: 변협 고문공청회
- 1. 23: 전문가들이 말하는 고문방지의 길
- 1. 24: 각국 고문방지제도
- 1. 26: 박종철 사건과 기본권 (이희창 변호사에 듣는다)
- 1. 26: 임의동행불응 국민운동전개 (이민우 신민당총재 회견)
- 1. 27: 인권침해와 도덕적 자각 (칼럼)
- 1. 28: 대한변협과 고문공청회
- 1. 28: 경찰서마다 고문신고센터 설치 (정호용 내무장관)
- 1. 28: 고문추방 범국민기구를 만들자 (변협공청회 각종 사례 대책)
- 1. 31: 고문추방 국민운동본부 추진
- 2. 3: 영장없는 연행금지 (치안본부 고문근절대책 발표, 이영욱 본부장)
- 2. 4: 정부 인권특위 신설
- 2. 4: 경찰의 고문근절대책 (사설)
- 2. 12: 불법연행 고문신고센터 설치 (739-2581-3, 지방변호사회)
- 2. 25: 릴레, 고문자행폭로 (유엔 인권위)
- 3. 18: 고문미술전집회 경찰 지지로 무산
- 3. 19: 고문추방운동 앞장 (KNCC 생명)
- 3. 27: 고문 뿌리뽑자 (대한변협)
- 3. 30: 고문추방본부 설립 논의 (변협 회장단 회의)
- 6. 1: 고문추방 개기로 삼자 (박홍수, 동아시론)
- 6. 8: 횡설수설

88년도

- 1. 16: 경찰 고문행위 여전하다 (사회면)
- 1. 22: 고문신고센터 가혹행위 6건 확인 (사회면)
- 1. 31: 새시대 바람, 사법부 공권력 진동
- 2. 2: 고문청산을 위한 새가지 시안 (박승재, 동아시론)
- 4. 8: 국제고문방지협약 가입 검토
- 7. 8: 명노열군 고문치사 경관 3년 실형
- 12. 20: 반고문의 질규 (반고문 반폭력반대 인간선언대회)

89년도

- 9. 8: 증진보전 어떻게 처리될까 (신문해설)
고문당한 사람의 고통과 배상 (사설)
- 10. 29: 검찰 고문 책임 불으라 (사설)
- 12. 16: 이한열 추모집 발간

90년도

- 9. 26: 고문자는 끝까지 추적하자 (동아, 사설)
- 11. 8: 고문진상규명 요구 (사노맹 사건, 전민련 민가협 성명)

91년도

- 1. 31: 고문 (동아, 형설수설)
- 8. 1: 고문하는 검찰 (동아, 사설)

92년도

- 8. 15: 형사법의 이념과 현실 (변협 심포지움)

93년도

- 5. 3: 고문방지 유엔협약 가입 추진

문건목록

- 과거청산과 불처벌 문제 (박현순 변호사)
- 조사에 있어서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광수, 연대박사논문)
- 광주오월민주항쟁의 심리적 충격 (오수성 교수, 전남대 심리학)
- 유엔 고문방지협약 자료
- 고문피해자 치료에 관한 자료
- 국제고문희생자 재활협회 자료
- 삼청교육대 자료

사례보고목록

75년도

유정식 (안동교도소, 국보)

77년도

김환진 (교교교사, 사망, 강제연행)

80년도

식달운 (전주 소, 간첩점견협외)

시경현 (국회의원, 밀입북)

임기운 (목사, 사망, 강제연행)

이충섭 (학생, 교내낙서사건)

81년도

박동현 (광주 소, 진도간첩단사건)

최영비 (학생, 고문후유증, 편지사건)

82년도

김정복 (대구 소, 남북어부조작간첩사건)

김정호 (//)

83년도

정영 (대교 소, 남북어부조작간첩사건)

이상철 (광주 소, 남북어부조작간첩사건)

함주명 (// , 간첩조작사건)

84년도

조봉수 (안동 소, 간첩조작사건)

85년도

김성만 (// , 구미유학생간첩조작사건)

황대권 (//)

이장형 (광주 소, 방북협외)

86년도

박인균 (살해기도사건)

윤여범 (// , 집시법위반협외)

강환웅 (학생, 고문후유증, 신길동 학생시위사건)

권인숙 (성고문사건)

87년도

김근조 (사망, 토지매입사건으로 연행)

박종철 (사망, 불고문사건)

88년도

- 1월: 명보근 (사망, 수원 여고생피살사건)
- 4월: 이신범 (민주발전연구소, 긴급조치위반혐의-71~75, 전기, 물고문)
- 12월: 권오성 (시민, 철도용의자혐의, 고문)

89년도

- 1월: 박중렬 (시국사범, 반제동맹사건)
- 4월: 황중수 (노동자, 마창지역시위관련, 전자봉고문)
- 6월: 방양균 (서경원의원 방북사건관련)
- 8월: 김정환 (국민대생 생매장사건, 프락치강요)
- 9월: 박명건 (시민, 재정신청사건, 세관현에개서 불고문)
홍성담 (민중화가, 국보법)
- 10월: 고교생 3명 (노동관련포스터 부착중 연행, 고문)
이인달, 이재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시민폭행치사사건)

90년도

- 1월: 차일환 (민중화가, 고문주장)
김진기 (시민)
- 4월: 고교생 (폭력조직 수사중 전자봉고문)
- 6월: 박상건 (시민)
- 9월: 관사 (고문혐의 전보안사장교 법정구속 건, 전화고문)
- 11월: 현정덕, 이성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

91년

- 4월: 권 도씨 (시민, 연쇄방화사건 용의자)
- 6월: 박득주 (조국통일촉진그룹사건, 국보법)
- 7월: 조국신 (소매치기혐의)

92년도

- 5월: 이동근 (시민, 강도상해혐의)
조항기 (시민, 부인살해혐의)
- 6월: 김성민 (시민, 살인사건용의자)
- 8월: 신정식 (시민, 상습절도혐의)
이기웅 (자살, 가혹행위)
김기웅 (순경, 애인살해혐의)

93년도

- 7월: 김종경 (시민, 화성연쇄살인사건용의자)

김종경

<한겨레 신문>

83년도

- 3. 28: 폭행수사 철저히 규명 (동아)
- 28: 두경관 가세했다 -한일합섬 김이사(동아)
- 28: 폭행한 경관구속 - // (동아)
- 30: 폭행경관 엄벌하라 - // (동아)

87년도

- 1. 17: 고문치사 유족배상금, 때린 경관이 물어라 - 김근조 사건

88년도

- 10. 21: 발가벗긴채 물고문, 전기고문 -민추위 사건85, 문용식
- 보림 다산 사건86, 김상복, 고경대, 고경미
- 전민련82, 민추위85, 박문식
- 전노련 사건81, 이태복
- 민청련 사건85, 이을호
- 가협 계엄령포고위반명 사건80, 노향기
- 삼민투 사건85, 허인처

89년도

- 5. 3: 가혹행위사실 심증근허 -전자봉 피해자 6명
- 5. 21: 전자봉고문관련 창원서장 고발
- 21: 창원경찰서장 고발
- 24: 전자봉고문 경찰 처벌요구
- 8. 25: 이길재, 방양군씨 고문
- 25: 잇다른 고문수사 주장 -방양군씨
- 25: 서의원 방북 6월에 알아 -방양군씨
- 26: 고문과 조작, 평민당 주장 -서의원 사건관련자 진술내용공개(동아)
- 26: 고문사실 폭로했다고 보복고문 -차일환씨
- 27: 양심수석방 고문중지 촉구
- 29: 고문까지 5공으로 돌아가는가
- 29: 잠안재우기 고문 뿌리뽑아야 -홍성담, 차일환, 정하수, 서경원, 이길재, 방양군, 박충렬
- 31: 고문상처 증거보전 신청 -화가 홍성담
- 31: 방양군씨 신체검증하기로
- 9. 5: 왼쪽 귀, 무릎등 상처 흔적 확인 -홍성담
- 6: 홍성담, 방양군씨 신체검정
- 7: 홍성담씨 고문 신체검정, 서의원 비서관 방양군씨 신체검정
- 13: 고문시비 쟁점 공방 치열할듯 -서의원 사건(한국)
- 13: 수사과정서 가혹행위 -서의원 사건관련 정성현, 이길재, 고금숙
- 23: 홍성담씨 안기부 고문 확인

- 30: 남북귀환 어부 무죄확정 -김성환씨
- 10. 18: 방양관 피고 구타고문 가능성 있다(경향)
- 19: 방양규씨 상처 고문 가능성
- 29: 뇌물혐의 공무원 검찰서 가혹수사 -이인현씨
- 11. 3: 김군성씨 7명이 고문 -차일환씨 첫공판때 증인
- 12. 15: 이창국장도 간첩사건 안기부서 고문조작
- 16: 안기부 고문 당해 유산 -김영애씨
- 25: 시국사범 고문 피해 폭로 잇따라 -미스유니버시티대회 폭파음모 사건80, 황인오, 권운상
-제헌의회 사건86, 김성식, 윤성구, 김한
-서노련 사건86, 김문수

90년도

- 1. 9: 차일환씨 사건 민가협에 협박전화
- 17: 불법연행 3억대 각서받다 -3년만에 밝혀진 고문수사
- 17: 2억 5천 지급약정서 받아내 -시민불법연행 고문
- 3. 15: 연애PD 검찰서 고문
- 23: 김현장씨 부부 구속관련, 서배틀린 시장 우려 표명
- 4. 5: 경찰이 전자봉고문 -고교생들
- 5: 전경이 전자봉고문 -조직폭력배 고교생
- 7. 25: 가혹행위 경관기소여부 관심쏠려
- 12. 20: 안기부 시국관련 피의자 고문-자민통, 김요섭(한림대), 송갑섭(전남대), 김기수(경희대 경제), 최원국(외대 영어), 전상현(중대 철학), 김지현(경기 학원 사학)
- 22: 안기부서 고문받아 -사노맹, 남태현

91년도

- 1. 13: 안기부 사노맹피의자 고문
- 15: 사노맹, 자민통 구속자 안기부 고문 허위자백(동아)
- 16: 안기부 구타흔적 확인, 자민통 사건 -김요섭씨
- 16: 안기부 고문 자민통 구속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 2. 13: 건설부국장 검찰서 구타의혹 -이동성씨(조선)
- 13: 검찰 건설부국장 구타의혹(동아)
- 23: 고문한 전 보안사 장교 보석
- 3. 6: 물고문 세관원 2명 5년구형
- 9: 안기부서 고문 박노해씨 부인 주장(조선)
- 4. 14: 경찰이 물고문 발생 -화곡동 연쇄방화30대 용의자(조선)
- 14: 연쇄방화용의자 경찰 물고문 주장(경향)
- 15: 석연찮은 빙화범 자백(중앙)
- 5. 15: 밀실 구타, 잠안재우기 갈수록 교활
- 15: 고문실태 -사노맹, 현경덕, 강제윤/ 자민통, 김요섭
- 7. 31: 검찰고문 자백무죄 -소매치기혐의 2명 원심깨고 석방, 조국신씨
- 31: 검찰 가혹수사 인정 무죄선고(조선)
- 8. 30: 경찰 58% 피의자 고문 불가피(한겨레, 이삭)
- 9. 18: 수사관 가혹행위엔 관용 -126명 고소, 고발에 구속 한명도 없어(중앙)

- 29: 농민운동가 가혹행위 총격
- 29: 농민운동가 가혹행위 파문 번져
- 30: 농민운동가 가혹행위 경관관 2명 직위해제
- 30: 미결수 가혹행위 경관들 직위해제(중앙)
- 31: 정주 경찰서장 시면경고
- 11. 3: 폭력감방 농민운동가 보석
 - 7: 갈수록 악화되는 개소자 인권(한겨레, 더불어 생각하며)
- 12. 16: 경찰이 허위자백 강요 -검찰측 증인연행 가혹행위(중앙)
- 17: 진술변복 강요, 경관 5명 소환(중앙)
- 17: 경찰이 진술변복 강요

92년도

- 5. 17: 애꽃은 시민 물고문 -이동근씨, 강도상해혐의
- 22: 고문경관 불구속처리 - //
- 22: 자백강요 물고문 -조항민씨, 피살주부 남편 용의자로 몰아(세계)
- 23: 주부변사 사건 가혹행위 경관 둘 영장(한국)
- 23: 물고문 경관 2명 형사 처벌키로
- 24: 물고문 경관 2명 구속
- 28: 살인혐의 무죄확정 20대, 경관고문 손배소송 -진현관씨, 비디오가게 모녀살해사건
- 6. 4: 한국고문희생자연호회 결성 -미국서.. 인권운동가 참여
- 27: 검찰이 6시간 물고문 -김중씨, 부산 밀수혐의 선형
- 28: 가혹행위 경관 넷 고소 -김성민씨, 살인혐의 무죄확정 20대(조선)
- 28: 경찰 물고문으로 살인방조작 -아가방 살인사건
- 30: 살인고문조작 고소관련, 경찰청 감찰반 자체조사
- 9. 5: 경찰 참고인 전자봉고문 -절도범 혐의(중앙)
- 8: 안기부서 참고인 가혹행위 -전희식씨, 전 민중당대표 김낙중씨 사건 관련
- 10. 20: 검찰 인신구속 남용 여전 -법무부 자료, 고문등 가혹행위 고발맨 냉담(90~92 무죄신고 1800건)
- 12. 20: 고문인정 무죄 선고 -함광웅씨, 살인폭력배 혐의(한국)

93년도

- 5. 3: 고문방지협약 가입 방침 -비준안 9월 국회제출(중앙)
- 6. 16: 고문방지협약 연내 가입 추진 -한외무, 세계인권회의 기조연설(한국)
- 7. 20: 눈물마저 빼앗아버린 고문명령 -문국진씨(한겨레, 동네방네)
- 9. 16: 유신아래 쓰러져간 남편 원혼 달래주오 -70년대 유신때 숨진 고교교사 아내 탄원
- 20: 고문피해 잇단 소송 준비 -5.6공 피해자들 정신질환, 자살등 후유증 심각
- 27: 고문방지협약 가입 -11월말 신청서 제출, 내년 발효(중앙)
- 24: 검사가 가혹행위, 피해자에 3천만원 배상
- 25: 검찰 고문 허위자백 국가 배상해야 -김학동씨, 불법감금피해 택시운전사 3천만원 지급
- 10. 3: 밀수혐의 강압수사 -보석상 여종업원 2명(경향)
- 13: 고문수사 부죄운전사, 담당 검사등 7명 고소(세계)
- 15: 살아남은 게 죽은 것만 못합니다 -최영미씨
- 16: 경찰조사 받다 정신질환, 2억 소송제기 -문국진씨

- 21: 안기부서 고문 . 성추행, 수사관 전원 고발 -김삼석, 은주 남매
- 11.9: 국가상대 잇단 손배소송 -구원희씨, 봉천동대로변 살인사건
 - 이귀남씨, 사문서 위조혐의
 - 문국진씨, 시국사범
- 12.3: 강희철씨 고문 간첩조작 -제주 재야단체 석방요구
- 29: 고문보상법 제정 청원 -피해자 가족 천여명, 박종철 부친등(중앙)
- 29: 사상범 고문해도 괜찮다 -최형우장관 말지 대담 파문, 재야단체 강력반발 요구

94년도

- 1. 10: 10년전 살인누명 고문후유증 폐인 - 김시훈씨(문화)
- 13: 고문경관 수사소홀 국가상대 손배소송 - 박충렬씨외3명, 반제동맹사건86
- 19: 살인혐의 2심서 무죄선고
 - 피의자 '물고문에 구타당했다' (동아-일반시민)
- 4. 12: '고문추방위해 제도개선을'
 - 피해자 사례보고회(한겨레)
- 7. 5: 고문혐의 안기부원 증거 없다 무혐의(한겨레)
 - 김철 민증미술가 차일환씨 고소 6명 혐의 입증 어려워
- 7. 8: 고문피해자 66명 수사관 집단고소(동아)
 - 백태웅씨 등 48명 복역중
 - 함주명씨 등 장기수 20명
 - 송갑석씨 등 전대협 8명
 - 백태웅씨 등 사노맹 관련자 6명
 - 손병선씨 등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20명이다.
- 7. 8: 고문수사관 무더기 고소 의미 (한겨레)
 - 함주명씨 등 장기수 20명
 - 송갑석씨 등 전대협 8명
 - 백태웅씨 등 사노맹 관련자 6명
 - 손병선씨 등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20명이다.
 - 국민대생 매장사건 김정환씨
 - 자민통 사건 김기수씨 등
- 7. 8: 시국사범 고문수사관 고소 의미(한겨레)
 - '과거 관행 물어두면 내일에도 계속될 것'
- 9. 4: 5,6공 고문피해자 9명 공소시효에 문제제기(한겨레)
- 9. 23: 고문방지협약가입 의결(한겨레)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민변·전국연합 토론회 안기부 해체하고 새 정보기관 신설해야

민주당·민변·전국연합 주최로 24일 오후 2시부터 세 시간동안 여의도 여성백인 회관에서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기부법·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2면 참조). 주제발표에 나선 강수림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안기부법 개정안에는 명칭을 국가정보처로 바꾸는 것을 비롯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감독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관 *안기부 예산을 국회에서 실질감사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민변의 조용환 변호사는 안기부법 개폐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정보기관에서 수사기능을 수행한다면 정보 왜곡되고 통제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며, 정권유지에 앞장섰던 안기부의 해체는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조 변호사는 정책수립과 보조 및 조연을 하는 새로운 정보기관이 필요하지만, 이 기관은 국민의 인권신장과 국가안전보장을 더 잘 수행

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의 일부에 대한 비공개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에서 강수림 의원은 현행 국보법을 폐지하고, 대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하려는 선동·선전의 규제를 중점을 둔 ‘민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입법을 주장하였다. 조 변호사는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내면의 생각이나 사상을 처벌할 수 있는 국보법의 폐지를 요구하였고, 또한 민주당의 대체입법도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토론에서 황인성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은 과거 정권유지의 도구로 악용된 국보법과 안기부법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하며, 안기부는 국회에 감사권이 있는 국무총리 아래에 대외정보기획관리국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노현 교수(민교협, 방통대)도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두 법은 마땅히 폐지해야 하며, 더욱이 국보법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만큼 폐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교수(경실련)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안기부가 기획·조정업무를 갖고 대통령 직속기관이 되는 것이 합당하며, 안기부가 각종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한정된 범위에서 수사권 존속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안기부 못지 않게 다른 수사기관에서 보안업무 관련 수사를 해왔으므로 이들 이유로 안기부에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그동안 안기부가 저질러온 변호인 접견권 방해, 발생수사 등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들며 더이상 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원진레이온 노동자, 정부 투자기관에 우선 채용키로 폐업대책 당정협에서

이인제 노동부장관, 우명규 서울시 부시장, 강삼재 민주당 의원 등은 24일 원진레이온 폐업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자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95년 완공예정인 구리시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전해투 해고노동자들
폭행당해 2명 입원
24일 창원 호성증공업에서

11월 24일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전해투) 소속 50여명의 해고노동자들은 해고사업장 전국순회방문 중 창원 호성증공업 앞에서 관리자 등 150여명에게 2명이 입원하는 등의 집단 폭행을 당했다. 전해투는 지난 10월 18일 이인제 노동부장관의 협의에서 군사정권의 희생자인 해고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장관은 해고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기업주를 직접 만나 대화할 것을 권유하였고, 전해투는 10월 22일부터 전국의 주요 해고발생 사업장의 기업주를 직접 만나 복지를 촉구하는 전국 순회방문을 하던 중이었다.

사후영장 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은 24일 전대협 전 의장 김종식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의사에 반해 체포, 연행된 것은 긴급구속을 당한 것으로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법한 시한내에 긴급구속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계산된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데도 안기부가 연행이를 뒤에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불법체포와 구금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알 림 ◆

- 장인인교육 관련 법안·공청회/국회 교육위 주최
·일시 및 장소:오늘 오전 10시-오후 3시, 국회 409호
- 발제자:김승국(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 김영환(선진학교 교장), 서광웅(한국장애인학부모회 부회장), 윤정몽(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이남진(변호사)
- 민간회, 국보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 거리 음악제
·일시 및 장소:오늘 오후 2-3시, 탑골공원
- 출연진:김영남, 서기상(꽃다지), 조국과 청춘(서충권), 박진원, 이기영(노래마을), 윤혜경(장의군씨 부인) 등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재워도 됩니까.”

최형우 내무장관 : “물론이지.”

「말」지 1월호 인터뷰 문민적 정부 실세 ‘인권의식’ 천박

최형우 내무장관이 「말」지 1월호 인터뷰에서 “사상문제라면 철저히 다뤄야” 한다며 ‘고문’을 인정하고 있어, 국민을 불안에 몰아 넣고 있다(아래 참조). 장관에 임명되기 전의 발언이라 해도 경찰을 지휘하는 내무장관의 인권의식이 과거 군사독재자나 냉

전 의식에 사로잡힌 권력자들의 모습을 닮고 있어 문민정부의 실상을 저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위 ‘문민’ 정부가 출범했다는 올해 들어서도 배병성씨, 노태훈씨, 김삼석·김은주씨 등을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잠안재

우기 고문, 심지어 성고문 등을 자행했음을 비추어볼 때 최 장관의 발언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고문관행을 부추길 위험을 안고 있다. 최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인권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말」 1월호, 인물연구/고개 숙인 실세 최형우의 진심 - 조유식 「말」지 기자

“(앞 생략) 이제는 소위 민주주의가 안되었다고 얘기할 사람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김영삼 정권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김영삼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이겁니다. 지금 김영삼 정권에서 민주화 안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 그런데 민주주의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많고…….

“지금 안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 예를 들어 안기부에서 잠 안 재우는 고문…….

“(말을 끊으며) 아 그런 거 다 고쳤다니까요.”

- 아니 여전히 가능합니다.

“누가 잡혀 가봤나. 누가 잡혀 갔어요? 이야기해보요.”

- 안기부에 김삼석 남매가 잡혀 갔지요.

“그거는 무슨 사상문제겠지.”

- 사상문제라고 해도…….

“(목소리를 높이며) 사상문제라면 철저히 다뤄야지. 그거는 국가문제거든. 지금 사상문제를 다루지 마라카면 큰일 나요.”

- 그러면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물론이지. 그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문제인데…….”

이 대목에서 기자는 잠시 컸을 의심을 했다. 고문은 사상문제와 무관하게 금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아닌가.

- 잠깐만요, 질문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사상문제로 잡혀온 사람은 안기부에서 잠 안 재우는 고문을 해도 되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했지요.

“국가를 전복하자는 것은 안되지. 국민들만 사람에게 물어봐도 한 사람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얘기하지.”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양심수 석방요구 집회, 다시 갖지 않기를’
민가협 집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는 22일 2시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집회’를 탑골공원 앞에서 가졌다.

민가협 회원 50여명과 박현서 교수(한양대), 이수갑씨(민족정기수호협 회장),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제6기 전대협 의장 태재준씨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조형권씨(93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가 어머니가 아들이 보내온 편지를 낭독하고, 임수경씨가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연설을 하였다.

안옥희 민가협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런 거리집회를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되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올해 안에 전원석방을 요구하였다.

임수경씨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은 감옥에 가야 할 죄를 결코 짓지 않았다”며, “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양심수’는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민가협은 지난 9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목요일집회’를 열고, 주마다 ‘43년 세계 최장기수 김신명 석방’, ‘조작간첩 진상규명과 석방 촉구’,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석방’ 등의 주제로 목요일집회를 열어왔으며, 특히 지난 17일부터는 ‘매일집회’를 가졌다.

"교묘해진 고문현실 (Torture moves into the shadows)" (요약)

- 한국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 -

영국 옵서버신문 : 국제앰네스티 베를린 사무총장 인권선언일 인터뷰

93년 12월 12일,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베를린 사무총장은 영국의 유명 일간지 Observer(옵서버)지의 인권선언기념일에 맞춘 인터뷰에서 "냉전이 끝난 지금 세계는 확실히 더 불안한 상태다. 지구 모든 곳에서 인권상황이 후퇴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썬네 사무총장은 많은 나라 정부들이 인권 침해사실을 감추고 좋은 이미지를 선전하는 기술이 점점 세련되고 있다고 평하면서, "정부들은 자국의 피자유어린 인권침해기록이 그들의 국제적 위신에 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짜 인권기구를 만들어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긴다. 거짓말을 반복한다. ... 이들의 위신은 상상을 초월한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한국의 외무장관은 '저는 한국이 인권이 꽃피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진실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가 마침내 승리한 나라와 민족을 대표해서 저는 여러분앞에 서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주후에 남한 경찰은 저명한 인권운동가 노태훈씨를 체포해 10일동안* 협박하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 그는 4개월 후인 10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이 있는 법에 의해 1년 징형유예의 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정부의 위신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썬네 사무총장은 또한, 한국과 같은 개발독재국가들이 국제무대에서 즐겨 인용하는 주장으로서 이른바 「백부릉의 테제」('인권보호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했다. "우리는 이런 논리와 정면으로 맞서대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자유와 권리가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자유 모두를 필요로 한다. 고문과 어린이들의 굶주림을 비교해 상대적 중요성을 논해서는 안된다. 양자가 모두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노태훈씨는 한국 외무장관이 위 연설을 하는 비엔나 회의현장에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호소문(발췌)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김재오 전도사가 경실련 농성에 참가한 13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을 인터뷰하여 정리한 것임.

우리들 대부분은 한국에 와서 매일 12시간 이상씩 공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처음왔을 때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낮에도 밖에서 열매가 채워진 공장안에서 일을 했고, 일이 끝난 후에도 갇힌 채 살기도 하였습니다. 일을 할 때는 공장 사장이나 관리자로부터 "빨리 빨리" 또는 "이 시키야"라는 말을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과였습니다.

그러나 월급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런 것을 좁은 쉽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노동자들은 잦은 구타와 폭행을 당하면서 일을 하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몇달씩 월급을 주지 않는 사장들에게 월급을 달라는 이유때문에 또다시 맞고는 공장에서 도망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들은 월급을 주지 않고, 회사를 몰래 팔아버리고, 자취를 감춰버리기가 일수입니다. 또 사장들은 출입국관리국의 정책이더라도 여권과 항공권을 빼앗고는 집에 가겠다고 해도 주지 않아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늘 여기에 온 우리 모두가 겪었던 공통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오늘 이곳에 합의농성을 하러온 우리들중 대부분은 손가락이 몇개씩 잘리고, 팔이 심하게 부숴졌지만 보상은 커녕 치료비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사장은 사고 당시 지불한 병원비가 아까워서 불구가 된 한 팔로 일을 시키기도 하였고, 입원비가 들까봐 손가락 4개가 잘렸는데도 당일 밤만 전문병원에서 입원시켜 응급처치를 하고 다음날부터는 조그만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하여 지금은 손가락 절단 부위의 뼈가 드러난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상금뿐만 아니라 일한 월급조차 지불하지 않고, 집으로 송금해달라고 말긴 개인돈이나 항공권료까지 떼어먹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중 험 나라안 쉼테스타(네팔인)씨는 사장이 보상해 주지 않아 상담소를 찾았다는 이유때문에 회사에서 구타를 당하다가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험씨의 개인짐을 모두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상담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는 단체들과 함께 기업주를 만나고, 경찰이나 노동부에 요청도 하였으나 불법취업자라는 이유때문에 모든 보호를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출국할 때는 적은 50만원에서 200여만원에 이르는 벌금까지 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불구가 된 몸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낯설은 이 한 국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도 없어서 부득이 처우개선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법노동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피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한국이 가난했을 때 많은 한국인이 이국땅에 나가서 고난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우리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사람으로, 이웃으로 맞아주셨으면 합니다.

Ali Amjad 등 방글라데시 3명
Manjo Thapa 등 네팔인 9명등 13인

<이달의 주제 - 행형>
수감, 연쇄, 차고 및 구속복 등
제구는 결코 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33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폭력검사 형사처벌 약속 지켜야

안강민 검찰부장 작년 11월 6일 "폭행 등 ...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
법무부 지난 3일 전처6주 부상입힌 안회권검사 3개월 감봉처분에 그쳐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수사도중 폭행한 전 인천 지검 안회권검사(현 영월 지청)와 서울지검 남부지청 송관호검사(현 목포지청)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검사의 폭력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소극적 태도와 한계가 드러나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고발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회권검사는 지난 1월 4일 새벽 마약혐의 혐의자로 연행된 김동철씨(37, 건측업)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전처 6주의 중상을 입혀, 대검찰청 검찰부(부장 안강민 검사장)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후 폭행사실이 확인돼 지난 달 15일 영월지청으로 전보되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또한 송관호검사도 1월 13일 새벽 술에 취해 뇌물혐의로 연행한 김용달씨(40, 노래방주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며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여, 지난 17일 목포 지청으로 전보된 바 있다. 이들 검사의 폭행사건 직후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대검 검찰부는 폭행사실이 확인되면 독직폭행혐의로 형사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안강민 검찰부장은 지난해 11월 6일 전국 검찰 전담검사회의에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 불법·탈법 수사 관행을 뿌리뽑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나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하는 등 탈법적 수사관행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징계조치로 문민적 검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경찰·검찰의 가혹수사가 계속될 우려를 낳고 있다.

노태훈씨, 경찰의 불법체포·감금 등 손해배상 청구

지나해 7월 13일 경찰청

남영동 본실에 연행되어 10월 20일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노태훈씨는 지난 2일 서울민사지법과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석태 변호사 등 3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제출하였다.

노씨는 연행과정에서 영장없이 수감을 채우는 등의 불법체포·감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도청 및 불법계좌추적, 집행유예 선고후 즉시 석방하지 않은 감금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액은 3천만원이다.

성희롱 변호사 대한변협 징계위에 회부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감창국)는 배아무개 변호사가 사무실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보던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델감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고 지난 1월 31일 '대한변호사회'(회장 이세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번 '변호사 성희롱'사건

과 관련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대위' 7일 오후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각계의 공적영역에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희롱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환영을 표시하였다.

또 '대책위'는 '대한변협'에 성희롱 문제에 대한 법률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서울대조교 성희롱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우아무개 조교 판결에서 여성권을 향상시킬 계기가 될 수 있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 등을 촉구했다.

배아무개 변호사는 지난 11월 24일 면접을 보던 최아무개씨(22)에게 성에 대해 지극히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자신의 성경험을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였다고 한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나해 12월 20일 최씨의 '진정서'를 접수한 후 1달간의 진상조사를 벌였다.

양심선언 박석진씨 집행유예

서울고법 합의5부는 7일 박석진 일경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인권하루소식> 103호는 2월 15일(화)에 발간합니다.

◆ 공 판 안 내 ◆

□2월 8일(화)

- 10시, 허탁, 국보법, 319호, 1회
- 2시, 김중호(전해군참모총장), 특가법(뇌물), 302호, 선고
- 2시, 이종구(전국방부장관), 특가법(뇌물), 309호, 선고

<인권하루소식>이 유료화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송신비때문에 부득이 1월부터 구독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구독료는 월 1만원, 2만원, 3만원 중 형편에 따라 납부해 주십시오.

제일은행(낙원지점) : 128-10-131017 서준식

<이달의 주제 - 행형>

미결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분리되고...벌도 대우를 받는다 <인권B규약 10조 2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 15일 대검찰청에

피의자 폭행한 안희권검사 독직폭행혐의 고발

서대표 "이번 사건을 통해 가혹행위에 대한 감시운동의 모범을 보일 터"

「인권운동 사랑방」은 서준식대표 명의로 지난 1월 4일 마약복용혐의 피의자인 김동철(37)씨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전인천지검 안희권검사(현 춘천지검 영월지청)를 15일 독직폭행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2면 참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킨 서대표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인권유린을 당한 후에 대응을 해도 소용

없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사람들은 의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온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의 가혹수사를 국민들이 감시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대표는 또 "검찰이 과거의 권위적 습성때문에 안희권검사를 형사입건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

지만,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안검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인권운동 사랑방」에서는 안검사의 고발장 접수 이후 인권관련 공무원들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지속적인 고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력남편 살해 이순심씨 살인혐의로 기소

수원지검 구본원 검사는 지난 달 16일 새벽 술에 취한 채로 부인을 폭행하던 남편 이건태(4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달 17일 구속된 이순심씨를 1월 31일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이순심씨는 남편 이씨가 술에 취해 마치로 가져다 구를 부수고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흉기로 남편 이씨를 찔러 사망하게 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의하면 승진 이씨는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부인을 폭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알림

□월간 「함께걸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한국특수교육 1백주년 기념 기획시리즈 <1>-한국특수교육의 성립과정/호주 장애우 복지현장을 찾아 <1>-유배지, 그 어두운 기억을 넘어서/우르과 이라운드, 무너진 농촌의 꿈과 현실/자본주의 노동시장과 장애인의 고용계약/장애예방과 복지사회

□나눔터-한국성폭력상담소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내용과 문제점-(최영애 성폭력상담소 소장)/직장내 성희롱(최은순 변호사)/위기상담(조중신 상담부장)/적어도 피임은 책임지는 멋진 남자(이미경, 단국대 여성학 강사)

□민족의 자존을 다시 찾는 작은 불씨-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요내용 : 윤금이 항소심 진행과정/미군범죄 재판권 행사율 1.17%/미군범죄신고센터 센터개설/미군헌병의 횡포/계속되는 미군범죄-한창열씨 사건등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를 1.17%에 그쳐 92년 10월-93년 8월 사이 850건중 10건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 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2년 10월부터 93년 8월말까지 모두 8백 50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했으나,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단 10건인 1.17%로 나타났다. 나머지 8백 40건은 미군측에서 자체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미군범죄에 대해 제대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다.

특히 「한미행정협정」의 여러문제 조항중 미군범죄와 관련 형사재판권 등을 규정하는 '굴욕적인' 22조(본문, 합의의사록)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

혀졌다. 「한미행정협정」 본문과 합의의사록 22조 규정에 의하여 윤금이씨 살해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 일병도 한국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때까지는 미군당국이 구금하도록 되어 있다.

미군범죄를 죄목별로 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1백 67건, *절도 60건, *관세법 위반 32건, *기타 40건순이다.

한편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신부)에서는 '주한미군범죄신고센터'의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2면 참조).

고 김남주 시인의 명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폭행검사 안희권 검사에 대한 고발장(사투)

고 발 장

고 발 인 : 서 준 식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B/D 501호

피고발인 : 안 희 권(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
(前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독직폭행혐의로 고발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피고발인은 1994. 1. 4 오전 1시경 마약복용혐의자로 인천지검에 연행된 김동철(37세, 인천시 남구 승의2동 300)씨를 술에 취한채 철제의자와 구둣발로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2. 피해자 김동철씨는 피고발인에게 당한 폭행으로 머리가 터지고 녹골 1대가 부러지는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3. 피고발인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 김동철씨를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도 없이 석방하였으며 수사관들을 김씨의 입원실로 보내 설득을 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4.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제반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커녕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힌것은 단순 폭력행위보다 더 엄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피고발인은 지난해 4월에도 마약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때린후 폭행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풀어준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0일에도 인천 증부경찰서 당직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직과장을 바꾸라고 요구한 뒤 당직형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술에 취한 채 수사관 2명과 함께 찾아가 난동을 부려 검찰총장의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는 자입니다.

6. 이 사건은 과거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직권남용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폐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인권관련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의당 사법조치되어야 합니다.

7. 지난해 11월 6일 대검 감찰부(안강민 검사장)는 전국 5대 고검 및 12개 지검 감찰 전담부장등이 참석한 전국 검찰전담검사회의에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폭언, 폭행과 같은 가혹행위에 대해 징계는 물론 형사 입건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김도연 검찰총장은 취임직후 수사과정중의 폭행은 물론 철야수사와 같은 간접적 폭력도 금지할 것을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첨 부 자 료

- 1. 조선일보 94.1.11(31면) 기사
- 2. 중앙일보 94.1.11(23면) 기사
- 3. 조선일보 94.1.13(3면) 사설
- 4. 중앙일보 94.1.14(3면) 사설

1994년 2월 15일

고 발 인 서 준 식(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대검찰청 키증

제6기 장애우대학 수강생 모집

장애우의 참모습 세워나가는 배움의 한마당

개 강 : 1994년 3월 18일 개강
문 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수강료 : 4만5천원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대구경북지역 제1기 장애우대학」을 3월 11일부터 매주 금요일 7시에 개설됩니다.
문의 : 053-628-5085나 02-521-5364

'미군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합니다

속수무책인 미군범죄,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미군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범죄 신고센터' 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군들에게 피해를 당하시거나 미군범죄를 목격하시면 즉각 신고해 주십시오. 아울러 운동본부에서는 미군주둔지역의 단체와 주민들이 '미군범죄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주한미군 범죄센터' 개설지역 : 동두천, 광복
준리지역:의정부, 송탄, 대구, 군산 등
연락처 :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
(전화 744-1211)

*정확한 현장검증과 증거확보를 위해 비디오카메라와 사진기가 필요하니 뜻있는 분들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 공 판 안 내 ◆

□2월 18일(금)

- 10시, 백성기,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309호, 항소심, 선고
- 2시, 황주석의 3인,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309호, 항소심, 1차

<이달의 주제 - 행형>

미결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분리되고, ... 별도 대우를 받는다

<인권B규약 10조 2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21일 항소심 끝나, 신문스크랩 국가기밀로 기소 김삼석 재판에 관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황석영(50)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기밀'의 개념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지 부장판사)는 21일 북한을 방문하고, 공작금 25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은 황씨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90년 9월 북한 서재골 초대소에

서 남한에는 1천여개의 핵이 배치돼 있다는 발언을 국가기밀누설죄로 인정한 1심과는 달리 "황씨의 말은 의신과 국내 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밝힌 것이고 정보의 대용도 핵문제 전문가가 아닌 황씨 개인의 주관적인 것이어서 국가기밀로서의 사실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에서 재야운동권 동향이나 재야 인사의 신원정보를 누설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무죄

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씨와 변호인이 '북에서 받은 미화 25만달러는 공작금이 아닌 장길산 원자료이며, 황씨가 대변인으로 일한 범민련 해외본부에 이적단체가 아니고, 황씨가 북한

에 대해 쓴 기행문들은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리려는 것'이라는 등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2월 28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김삼석씨 남매의 경우 군사 및 핵관련 신문스크랩이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탐지·수집책'인지, 한통련이 반국가단체인지, 안기부의 고문에 대하여 범인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판안내◆

- ◇22일(화)/·허탁, 국보법, 319호 10시, 선고
·이상욱, 국보법, 423호 3시, 속행
- ◇23일(수)/·김옥기, 국보법, 418호 10시, 선고
- ◇25일(금)/·이종수, 군무이탈, 303호 10시, 6회
·김주옥, 집시법, 317호 11시, 6회
·신학철, 국보법, 422호 3시, 속행

최내무장관, 고문용인 발언 "표현이 잘못되었다" 시인 "말을 아껴야 된다는... 큰 교훈 얻어" 실천내용은 없어 19일 국회본회의 유인태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지난 2월 19일 임시국회에서 말지 인터뷰에서 한 "사상범은 잠은 안채워도 된다"는 발언의 진위여부를 묻는 유인태 민주당의원에 질의에 대해 "표현이 잘못되었다. 말을 아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얻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등 8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28일 *공개사과, 구체적인 인권보장 계획 마련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즉각 구속 *고문방지협약 가입 등의 요구한 바 있다.

최형우 내무부장관 발언 부분 발췌

◇말지 1월호 인터뷰

(중략)-그러면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채워도 됩니까.

"물론이지. 그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문젠데...

-질문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사상문제로 잡혀온 사람은 안기부에서 잠 안 채우는 고문을 해도 되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했지요.

"국가를 전복하자는 것은 안되지. 국민들만 사람에게 물어봐도 한 사람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얘기하지."

◇93년 12월 29일 최 장관이 인권단체에 보낸 해명서(중략) 인터뷰 도중 기자와 민주주의의 성취도에 관해 얘기를 나누던 중 안기부에 누가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상문제라면 안기부가 다룰 수밖에 없지 않는냐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사상문제라면 잠을 안채워도 되느냐고 물어 안된다는 뜻으로 "물론이지"라고 대답한 것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중략) 저는 '말'지가 소재목으로 뽑은 '사상범은 잠 안채우는 고문해도 돼'라는 말은 결코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94년 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답변(속기록 중에서) 유인태의원:(중략)말지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문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 피력을 상당히 감명깊게 들었습니다만 우선 그 사실여부가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중략)

최 내무장관:(중략)저는 물고문도 당한 사람입니다.(중략) 이런 아픔이 있는 저로서는 제가 내무부장관에 있는 동안에는 고문을 없앨 것입니다. 단 자신이 말지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류에 한해서 기사화한다는 전제하에서...그 다음에는 off로서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체에 있어서 저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야 되겠다는 것을 큰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이달의 주제 - 행형>
 미결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분리되고... 별도 대우를 받는다
 <인권B규약 10조 2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보사부 산하 '장애인복지위' 장애인 권리보장 의문

15일 보사부 ESCAP의 '국가조정위'를 장애인복지위로 대체
 장애인단체 "ESCAP에 보고만을 의식한 요식행위" 반발

정부가 최근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가운데 핵심사안의 하나인 국가조정위원회 설치를 보사부 산하의 기존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확정짓자 관련 장애인단체들이 이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 15일 장애인단체 관계자, 정부 및 학계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된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 관련 정책의 입안·평가·조정 기능을 가진 민관합동의 국가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서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장애인 관련단체들은 "국가조정위원회가 부처간의 강력한 업무조정과 재정확보를 위한 기능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사부 산하의 기구가 대행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대표 장기철)는 22일 성명을 통해 "10년 행동계획의 핵심사안인 국가조정위원회는 각 부처간의 강력한 업무

무조정 등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사부 산하의 일개 심의기관이 대행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며 "2년마다 1회씩 보고하게 되어 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한국장애인연맹'(대표 송영욱)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장애인복지 10년위원회'가 꺾전에 '생생하다'며, "정부가 주도하여 채택한 10년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국가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사부 장관에게 장애인 관련 정책을 건의하게 되어 있는데, 91년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단 두차례 회의가 열렸을 뿐이다.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은 92년 4월 제4차 ESCAP(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총회에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아·태 장애인 10년'이 선포되고, 같은 해 12월 '아·태 장애인 10년'의 성공적 개시를 위한 ESCAP회의에서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이 채택되었고, 각국은 2년마다 장애인 권리의 진전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정신대 다룬 '소리없는 만가' 일본공연 모금액 3월 1일 '나눔의 집'에 전달 예정

정신대 할머니들의 고통을 다룬 '소리없는 만가'를 공연한 극단 '한두레'(대표 정연도)가 3월 1일 오후 1시 조계사 내 조항가든에서 '불교인권위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집행위원장 박준호)에 '소리없는 만가'의 일본순회공연에서 조건의 정신대 할머니를 생각하는 모임' 등에서 모금한 금액 등을 전달한다.

극단 '한두레'의 마승락 씨는 "일본순회공연중 일본인들이 모아준 성금의 취지를 살리고자 정신대 할머니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나눔의 집'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극단 '한두레'는 '소리없는 만가'를 경희대, 외대 등 전국 19개 대학에서 공연하였고 일본의 정신대

관련단체에서 초청해 일본 13개 지역에서 공연되었다.

"경찰의 인격무시 행위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의경폭행형의 피고인 2심서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는 25일 교통단속 의경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송태일 피고인(42)에게 무죄를 선고, 경찰이 국민의 인격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단속 의경의 부당한 강제연행을 막기 위해 경관을 밀친 것을 사회통념상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의경이 욕설을 하는 등 무리하게 단속했으며 범법사실이 없자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범칙금을 부과해 이에 항의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송피고인은 지난해 5월 통일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의경이 욕설을 하는 등 과잉단속을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연행하려는 경관을 밀친 혐의로 약식기소됐었다.

◇ 바로잡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1호(2월 24일(목)자 1면 '3·8' 여성대회 기사중 '한국여성노동자대회'는 3월 7일이 아니라 3월 5일(토)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의 구독료는 월 1만에서 3만원입니다.
 구독번호: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경찰, 학원사찰·프락치 공작기도

4일 한층련 밝혀

불잡힌 경찰도 사실시인

서울경찰청이 김영삼 정부 출범후에도 학원사찰을 계속해온 사실이 4일 한양대에서 학생들에게 불잡힌 경찰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로써 지난 2월말 부산에서 안기부에 운용된 소년 프락치가 폭로된 데 이어 학원사찰, 프락치공작의 악습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임시의장 김현준, 부산대총학생회장)은 4일 오후 3시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양대내에서 사찰활동을 벌이던 서울경찰청 보안2과 소속 강형세 경장(45)을 불잡아 경찰이 5개월 전부터 '한층련 전담반'을 운영해왔으며, 전담반은 수배자 동향파악, 학생들의 쌀 개방반대 시위 사전파악 등의 사찰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한층련 전담반'이 학원내에 프락치공작을 기도했음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경장이 자술서, 반성문 등의 내용을 시인함에 따라 확인되었다.

강경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학생회관 쓰레기장에서 한층련 관련 인쇄물 2, 3종을 수거한뒤 대운동장을 지나가다 이곳에서 아침운동을 하던 한양대 총학생회 간부 10여명에 의해 불잡혀, 서울시경찰청내에 '한층련 전담반' 구성된 사실과 이들의 명단공개, 학원사찰의 방법, 프락치 공작기도 등의 내용이 담긴 자술서와 반성문을 쓰고 4일 오후 4시경 풀려났다.

강경장은 '자술서'에서 프락치 공작 기도사실에 대하여 "도덕적인 관념에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며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 확신합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층련은 이와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이 5개월전부터 '한층련 전담반'을 운영하며 벌이고 있는 학원사찰행위는 개강을 전후해 고조되는 쌀수입개방저지 학내 분위기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현정부의 숨은 의도"라고 말한뒤 서울경찰청장 즉각 사과, 관련자 직위해제, '한층련 전담반' 공개 해체 등을 촉구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경찰청에 위의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국보법을 철폐하라'-민가협 '국보법,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AI 한국지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4일 역대정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어 불법감금, 불법고문 등에 의해 조작되어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 222명중 62.6%에 이르는 139명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히며, 그동안 한국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였다.

「민가협」은 또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마저 국가보안법 철폐를 '희망'하는 마당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해 더 이상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앤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4일 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 간첩활동 그리고 국가기밀 등을 모호하고도 폭넓게 규정하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협약과 국제적인 인권규준들에 합치시키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I 한국지부」는 성명에서 92년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에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인용하며, 국가보안법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

한 제한조항들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 등에 의한 제한의 범주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성인신매매·전쟁피해문제 회의

3월 9일-15일 등경에서

'여성인권모의법정'도 열어

아시아 지역 각나라 여성들이 여성인신매매와 전쟁피해로서의 아시아 여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가 오는 3월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동안 일본 동경에서 열린다.

지난 91년 구성된 '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법률가, 여성운동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아시아 여성인권 모의법정'이 진행된다.

또 95년 북경에서 열릴 '세계여성대회' 참가 논의, 아시아 지역의 여성인신매매와 전쟁피해 여성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는 워크샵이 열린다. 이외에도 일본의 흥등가인 신주꾸를 비롯, 아시아 여성이 주노동자들의 현장을 방문하고, 전쟁범죄 희생자를 위한 촛불추모제와 거리행진도 계획되어 있다.

한국측에서는 '모의법정'의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이우정 의원(민주당)을 비롯하여 김복동씨(정신대피해자), 김현자씨(미군에 의한 희생자), 이번 회의의 한국측 책임자인 이예자씨(KNCC 여성국장) 등이 참가한다.

알림

■ 사회적 평등과 고용안정을 향한 제7차 여성노동자 대회

- 주최 : 3·8 세계여성의 날 86주년 기념 공동위원회
- 일시 : 94년 3월 5일(토) 오후 3시-6시
- 장소 :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강당

▷ 1부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

- 대회사 : 김유미(병노련 위원장) / 기념사 : 양규현(전노협 의장)

- ▷ 2부 : 3·8 여성의 날 기념 신곡발표 / 모노드라마 '일하는 여성'-김지숙(연극배우) / '병원노동자의 하루'(병원노련) / 노래공연(사무금융노련, 병원노련, 전문노련 노래패)

■ 각 지방 3·8 여성의 날 기념 행사일정

- 인천 : 6일 오후 2시 / 부평4동 성당
- 마산 : 8일 오후 6시 30분 / 가톨릭 여성회관
- 광주 : 9일 오후 6시 30분 / YWCA 강당
- 부산 : 13일 오후 2시 / 부산대학교 호원회관

여성의 전화 93년 6천7백59건 상담

아내구타 30% 법률적 지원, 피난처 제공 필요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 상담 통계결과에 따르면 93년 한해동안 상담 건수는 모두 6천7백5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화상담은 6천1백건, 면접상담은 6백59건으로 92년도에 비해 12%의 증가를 보였다. 평균적으로 보면 매일 5백63건, 매일 18.8건의 상담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천7백59건의 상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구타가 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부갈등(22%), 의도(18%) 순이었다. 이 빈도와 순위는 92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

이중 93년 4/4분기 상담상수는 1천8백22건으로 전화상담 1천6백44건, 면접상담이 1백64건에 달했다. 상담내용 분류에서는 93년 통계와 마찬가지로 구타가 34%로 가장 많았다. 특히 면접상담 결과 61%가 구타로 나타나 아내구타 문제의 현실을 짐작케 했다. 이들 61%중 한 달에 1번꼴로 매를 맞는 여성들은 30%였고, 한 주에 2-3회 정도 매를 맞는 여성들은 18%, 거의 매일 매를 맞는 여성들은 무려 10%나 되었다. 게다가 이들중 50%가 구타남편이 아이를 때리고 있다고 대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던져주었다.

한편 면접상담자들의 인

적상황을 보면 나이는 31-35세가 26.86%, 26-30세가 22.47% 순이었고, 학력은 고졸이 33.33%, 대졸이 20%를 나타냈다. 또한 결혼년수는 10년 이내가 40%, 15년 이내가 23.33%였다.

또한 구타당하는 아내들이 여성의 전화에 가장 원하는 것은 법적지원 41%, 피난처 제공 31%였으며, 정신적·심리적 지원 28%,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이 27%였다(복수응답 포함).

장안동 대공분실 소속 15명 불법체포 고발

민가협 "고발운동 전개로 경찰폭력 뿌리뽑아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는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을 불법연행한 서울지방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 수사관 15명을 불법체포, 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접수번호 1544).

「민가협」은 고발장에서 "시민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피고발인들이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인권침해를 하였다"며 철저적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앞선 25일에 가족들이 고발장을 냈다.

민가협의 한 관계자는 "김영삼정부 1년을 넘기면서 경찰이 더욱 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시민들과 인권단체들이 나서서 '고발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경찰폭력을 막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4일 경찰에 연행된 이운정(24, 부산수산대출)씨 등 6명은 '붉은 산 검은 피'(오봉옥 시)를 PC통신인 천리안에 게재했다는 혐의로 이씨와 이

여성의 전화 상담부(부장 이문자)는 "법률적 지원, 피난처 제공 등은 구타 여성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같이 구타남편으로부터 격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와 구타남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월 21일 새벽, 23년간 자신을 구타해온 남편을 결국 살해하고만 이순심씨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내구타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볼 뿐 사회적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고 덧붙였다.

상염씨 등 2명은 구속되고, 황성현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또 불법연행, 감금, 협박사건 노동자 4명 연행

27일 밤 울산 현대중공업 백형록 대의원이 불법연행된 데 이어 서울에서 28일 까지 조돈희·이완순·함평기씨 등 4명이 「혁명적 국제사회주의 노동자동맹」(혁사노) 사건으로 연행되었다.

백씨는 27일 밤 10시 10분 경 회사에서 분양한 동부아파트 관리인을 앞세워 들이닥친 정체불명의 괴한 10여 명에 의해 납치당했다. 백씨의 부인이 누구냐고 물으며 항의하자 감금하기도 했다.

또한 함씨는 28일 오전 11시경 전해투 사무실(여의도 민주당사)이 있는 여의도 백화점 1층에서 경찰과 몸싸움 끝에 연행되었다. 이씨는 이날 아침 출근 길에 연행되었으며, 백씨 등 4명은 홍계동 대공분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울분 임금협상을 앞두고 백형록 대의원의 납치사건은 현대중공업 2만2천여명에 대한 공세이다. 노조는 이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히며, 백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10일 혁사노 사건으로 연행된 6명은 공판이 진행중이다.

이번 혁사노 사건의 연행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백형록(34);현대중공업 대의원 ◇조돈희(36); 현대중공업 조직쟁의실장, '울산민주노동자협의회 의장'
- ◇이완순(34);인천 동흥전기 노조위원장 ◇함평기(31);삼익악기 해고노동자

의문사 진상규명 노력할 터
이내창열사추모사업회 총회

이내창열사추모사업회(명예회장 장임원 중대의대교수)는 26일 정기총회에서 김종현(83,영어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새로이 꾸렸다. 또한 올해 주요사업으로 이내창열사추모집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0월경 발행예정인 추모집은 ▲이내창열사의문사 백서 ▲한국 및 국제인권사학들의 내용으로 꾸며진다. 그밖에 열사유고작품등이 실릴 예정이다.

한편 이철규추모사업회 등 의문사관련 추모사업회 모임이 4월 4일(월) 오후 3시 유가협사무실에서 열리며,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전국민족민주열사 추모(기념)사업회 연대회의가 열려 총회준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문의 764-1684).

양심선언 규경 소식지 발행
「양심선언 제3호」

'계속되는 양심선언' '자주 국방의 실현과 평시 작전 통제권의 환수' '전경대설치법 왜 위헌인가' 등의 내용으로 24일 발행했다.

구 타	30%
부부갈등	22%
남편의도	18%
법률문제	11%
미혼여성문제	7%
시집갈등	6%
주부 개인문제	3%
강 간	2%
기 타	1%

<이달의 주제 - 여성>
임신 또는 출산후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
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2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린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노태훈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동일한 표현물이라도 소지한 사람에 따라서 이적성의 유무가 판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되어, 재판부가 사람의 내심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30일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노태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린 원심판결을 재확인했다.

출소장기수들의 글이 실려 있는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를 소지한 것이 이적목적이 아니라 단순소지한 것이라는 항소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이적목적이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동일한 출판물이 언론기관에도 배포된 것이고 통일원에서 운영하는 북한자료센터에서도 볼 수 있는 등 누구

나 북한관련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데도 특정인에게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법집행이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야구선수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폭력단원이 야구방망이를 드는 것은 폭력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지하느냐에 따라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북한이 여전히 위협적 존재이고 어떤 위업든지 그 나라의 특정한 환경에 따르므로, 외국에서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영향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노씨는 판결후 "똑같은 출판물을 소지했는데 소지한 사람에 따라 유죄가 가려진 셈"이라고 공박하며, 재판부가 그 어떤 수단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내심을 판결의 대상으로 삼

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씨는 또 "판사가 '야구선수는 폭력배든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의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는 것 같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반박하였다.

노씨는 93년 7월 구속되어 같은 해 10월 2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었다.

'21세기를 향한 노인복지의 과제' 한·일 합동심포지움
29-30일 부산대

29-30일 이틀간 한·일노인복지 학술심포지움이 부산대 사회과학대학과 일본 사회사업대학 공동 주최로 부산대에서 1백50명이 참석한 속에 열렸다.

'21세기를 향한 노인복지의 과제'의 주제로 열린 심포지움은 양국의 노인복지 현황과 과제가 5가지 주제 발표로 다뤄졌다.

'21세기를 향한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의 방향' 주제

발표는 마에다 아이사구(前田大作, 일본사회사업대학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과 최성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또한 김기태(부산대 사회과학대) 학장이 '한국시설노인의 욕구를 통한 사회복지 실천방안과 정책과제'를, 사회복지연구소의 우야마카츠요시(宇山勝儀) 주관이 '일본에 있어서의 유료노인홈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학술심포지움은 부산대 사회과학대학과 일본 사회사업대학이 93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처음 가진 행사로 해마다 양국을 번갈아 가며 열 계획이다.

혁사노사건 4명 구속
"잠 안재우고 수사중"

'혁명적 국제사회주의노동자투쟁동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법연행된 백형록, 조준희, 이완순, 함평기씨에게 30일 저녁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백씨들은 구속영장 제시 없이 연행된데 이어 30일 현재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면회결과 밝혔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I' 발간됩니다

준비1호부터 제100호까지 발행했던 <인권하루소식>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 발간합니다. 총 340쪽의 합본호에는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의 머리글 「김영삼정부 1년의 인권」이 실렸습니다.

발간예정일 : 4월 2일(토)

값 : 15,000원 (정기구독료 납입자는 무료 기증합니다)

알림

□제29차 민가협 목요집회

"희망새 석방, 참작의 자유 보장"

·일시 : 3월 31일(목) ·장소 : 안국동 일본대사관 앞
·출연 : 노래마을, 노래공장, 김영남, 류금신씨등이
'희망새의 석방'을 위한 노래를 부른다.

□바로잡습니다

<인권하루소식> 3월 30일자 '혁사노사건' 기사에서 '합기평'씨는 '함평기'씨로 바로잡습니다.

국제인권소식

인터뷰: IS 사무소장 아드레앙 졸라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평가 "인권단체 전문성과 상호연대 더 중요"

아드레앙 졸라(Adrien Zoller)는 국제인권봉사사회(IS, <인권하루소식> 3월 8일자 참조) 사무소장이다. 84년부터 10년동안 유엔 인권기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온 국제적인 인권문제 전문가 졸라씨를 '인권운동 사랑방' 장소영씨가 3월 18일 제네바 IS 사무실에서 취재했다. 다만 제50차 인권위원회가 3월 11일 끝나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번 인터뷰 기사는 상징적인 표현이 많다. 50차 인권위원회의 종합적인 평가는 IS에서 4월에 발간하는 'Human Rights Monitor' 24집에 실린다.

▶ 이번 5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

▷ 아직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 흐름을 살펴보면,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정부대표들이 이번 회기에서 좋지 않은 내용의 결의안을 제안할 때 혹은 발언을 할 때, 비엔나 인권대회 선언문을 인용하여, 비엔나 인권대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비엔나 선언문은 이제까지 확보한 인권의 각 기준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최소 수준에 머문 문인들이 많았다.

그리고 특정 나라나 지역에 대한 결의안의 경우 작년보다 나은 내용이 없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토고(Togo)의 인권침해에 대한 결의안은 작년보다 그 결의내용이 약하다. 반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특별보고관과 사법부의 독립 및 공정성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을 두기로 결의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특히, 이미 작년에 거의 확정된 이야기이지만, 여성 특별보고관은 여성인권단체들의 큰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결정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작년이 '원주민의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결의안은 초점이 불분명하다. 내 생각에는 대부분의 정부대표들과 유엔 사무국원들이 원주민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평가는 이

후 『HR Monitor』 24호에 실겠다.

▶ 특징적인 변화가 있다면?

▷ 인권위원회 운영에 있어 실무분과(Working Group)와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들의 역할이 존중되고 그 위임사항이 넓어지고 있다. 그동안 운영의 효율과 인권신장을 위한 절차들은 거의 사무국이나 의장이 제출하는데 번번이 정부대표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관행에 비추어볼 때 위의 경향은 전문성이 강화되고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좋은 현상으로 발전이라 볼 수 있다.

▶ 결의안들이 갖는 균형감각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인권위에서의 남북갈등은 어떠했나?

▷ 선진국과 비선진국들의 정치적 갈등이 역시 반영되었고, 전반적으로 일부 국가에 대해서 편파적이었다고 본다. 특히 남미의 경우 쿠바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결정이 대표적이다. 물론 쿠바에 인권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미의 다른 나라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비해 불공평한 결정이었다.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 미국의 입장을 비판할 필요가 있다. 또, 서방국가들은 그룹으로 대응하는데 인권문제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전략도 없다고 볼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은 계획없이 즉흥적인 발언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미국의 경우 자신의 목표, 즉 쿠바를 공격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 중국과 쿠바에 대한 표결동향은?

▷ 중국의 경우 작년에 비해 중국 지지표가 줄어들었으며, 쿠바는 일부 반쿠바표를 기권표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쿠바는 미국의 봉쇄정책이 가져온 고통을 설득력있게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문제가 우선이고 인권은 내정문제라며 국가주권을 강조하여 호응이 약했다. 하지만 실제 결의안 처리과정에서는 중국이 큰 나라이고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점이 작용했다. 특히 작은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도 쿠바결의안에는 미국을 쫓아 찬성표를 던졌지만 중국결의안

에서는 기권했지 않은가?

▶ 이번 회기 인권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소감은?

▷ 비효율적인 모습과 발전된 모습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앞으로, 특별보고관과 실무분과의 역할 증대는 더 많은 논란거리, 더 많은 문서, 더 많은 정보를 뜻한다. 또한 인권단체들의 할 일이 많아진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안전도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몇가지 주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의 개선이나 다른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권단체들의 전문성과 상호간 협조관계가 중요하다.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김삼석 남매 고문사례 다뤄

동아시아 경제문제 전문주간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는 3월 31일자에 한국의 인권문제를 다룬 기사를 한면에 걸쳐 게재하였다. 국제엠네스티의 한국 인권보고서와 김삼석 김은주 고문사례를 다룬 이 기사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모든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이 잠 안채우기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동시에 주광일 부장검사가 "우리는 잠 안채우기가 고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인용 보도했다.

아시아학생연합, 북경 세계여성대회를 위한 준비회의 가저

아시아국가들을 회원단체로 두고 있는 아시아학생연합(ASA) 지난 2월 18-20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사상 처음으로 남아시아 여학생회의를 가졌다. '평등, 자유, 안정'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모임의 취지는 95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될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제기할 공동입장과 공동대응 방침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석자들은 북경회의에서 "아시아 각국의 정치경제상황과 여성인권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입장을 제기함과 아울러, 아시아 정부들의 거짓 보고서와 문서들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활동을 준비하기로 했다. 아직 동북아시아에서 이와 비슷한 모임은 계획된 것이 없다.